

## 코로나 위기 1년 원인도 결과도 자본주의적

관련 기사 6~7, 8~10면



사진 출처: 대구가톨릭대병원

변창흠·이용구 논란  
실체 드러낸  
문재인 정부의  
'개혁' 인사

3면

알맹이 빠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4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배한 2020년  
세계 정치

6~7면

코로나19 발생 1년  
팬데믹, 자본주의,  
불평등

8~10면

이 사국에  
전기요금 인상

13면

자본주의 위기와  
함께 가는  
쌍용차 위기

14면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파업 11면  
플랫폼 종사자 대책 14~15면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15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6면



# 이상민 민주당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 예정 성소수자 차별 금지 포함했지만 보수 개신교 눈치 보느라 구멍 송송

성지현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조만간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포함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법안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민주당 의원의 차별금지법 발의는 7년 만이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발의하면서 처음 세상에 나왔지만 여태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차별금지법은 경종을 비롯한 재계와 보수 개신교계가 학력, 성적지향 조항 등을 문제 삼으며 반대해 무산됐다. 이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몇 차례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보수 개신교계의 눈치를 보며 후퇴와 배신을 거듭해 왔다.

급기야 2017년 대선 때 문재인은 보수 개신교계를 찾아가 ‘염려 말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올해 총선에서 민주당 사무총장 윤호중은 성소수자 문제를 두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라고 일축했다. 성소수자 문제에 냉담한 정부와 민주당 주류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는 것은 일보 전진이다. 특히 이 사회에서 차별받는 성소수자들은 민주당이 이제라도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을



차별 금지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 우파 눈치 보기일 뿐 2017년 12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대회

포함시킨 것을 다행이라 여길 것이다.

이는 최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위기가 심화하고 지지 세력의 이반이 느는 상황에서, 진보 엔지오들의 지지를 잃지 않으려는 시도와 무관치 않은 듯하다.

그런데 이상민 의원안은 한계가 크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종교 기관에서의 해당 종교와 관련된 행위’를 예외로 둔다는 점이다.

물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도 예배나 설교와 같은 종

교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진 않는다. 예배나 설교 같은 ‘정치적 주장’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규율 대상을 고용, 교육, 재화·용역·시설, 행정 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로 한정하고 있다. 보수 개신교 인사들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만 해도 잡혀간다’는 식으로 호들갑 떠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이상민 의원안은 ‘종교 단체에 소속된 기관’까지도 예외로 뒀다.

이는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병원, 언론, 사회복지시설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고, 그러면 예외가 지나치게 넓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을 보면, 이 나라에 종립학교가 145곳, 종립 요양 의료기관이 399곳이나 된다. 이런 기관들은 공공 영역의 일부이고, 많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런 기관 일체를 예외로 두게 되면 법안에 구멍이 송송 나는 것과 다름없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이 조항이 “종교기관은 차별금지법 적용에서 면제되는 특권적인 지위에 있다는 인식을 증폭”시킬 수 있고 “실질적인 차별의 구제 및 해소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 알려진 내용을 보면 정의당 법안과 비교해 차별 구제와 실효성에도 약점이 있다. 정의당 법안은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했고(유일한 형사 처벌 조항), 차별을 한 기관이나 행위자에게도 입증 책임을 배분하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안은 이런 점이 빠져 있다.

그런데도 보수 개신교 교회는 이상민 의원안을 거품 물며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 안과 유사한 ‘동성애 독재법’”이라고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엄포도 댔다. 허점이 많더라도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공인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것 자체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보는 것일 테다.

물론, 이것은 보수 개신교계의 극성스러운 편협함을 다시금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동시에 이리저리한 타협안으로 법안을 후퇴시켜 이들을 설득시키려는 시도도 무망함을 보여 준다.

## 성평등 수업 교사에 대한 광주교육청의 징계 강행 행정 횡포 비판에 재갈 물리기

조수진 전교조 전국대의원

12월 18일, 광주교육청은 수업시간에 성평등 영화를 상영한 배이상현 교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통보했다.

광주교육청 징계위는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배이상현 교사를 징계했다. 1년 넘는 직위해제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건강마저 악화된 배이상현 교사에게 또다시 고통을 강요한 것이다.

광주교육청은 여성단체들도 추천한 성인지 교육용 영화 〈역발반는 다수〉를 수업시간에 상영한 것을 성비위로 몰아 왔다. 배이상현 교사가 하지 않았다고 밝힌 수업시간의 발언들도 징계 사유가 됐다.

그러나 학교 수업 중 성 관련 단원은 그 속성상 기존의 보수적 성관념에 도전하는 내용들이 포함되므로 학생들의 ‘불편함’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배이상현 교사가 했다는 발언들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이미 무혐의 처분됐다. 그런데도 일부 학



12월 7일 광주시교육청 앞 기자회견을 연 전교조 광주지부와 배이상현 교사

생의 진솔과 주관적 느낌만 앞세워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중징계를 강행한 것이다.

배이상현 교사 측의 항의운동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징계의 근거가 무색해지자, 이제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현 교사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교육청을 비판한 글을 ‘2차 가해’로 규정하며 징계 사유에 추가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도 호소하지 말고 그저 ‘닥치고 복종’하라는 것이다.

결국 이 징계는 광주교육청의 부조리한 행정 횡포에 맞선 교사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자 재갈 물리기인 셈이다.

게다가 12월 7일 열린 징계위원회는 기피 신청과 증인 신청 등 배이상현 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도 않았다.

배이상현 교사에 대한 징계 처분에 전국의 교사들이 주목하고 있다. 초등 교사, 도덕·보건·과학 교사처럼 교육 과정에 성 관련 내용이 포함된 교과

그림과 조각상이 가득한 교과서를 다루는 미술 교사들도 학생들이 혹시 느끼지 못할 ‘수치심’과 ‘불쾌감’ 때문에 마음 졸여야 할 판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지난 7월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현 교사를 방어하기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성평등교육 탄압 대응 투쟁안’이 사업계획안으로 통과된 바 있다. 교사들을 위축시키는 교육당국의 탄압에 항의해야 한다는 기층 교사들의 목소리가 컸던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 지도부는 1년 넘도록 시간을 끌며 징계 위협에 놓인 조합원을 방치했다. 대의원대회 결정으로 전교조 내에 ‘배이상현 교사에 대한 성평등교육탄압 대책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실질적 활동 없이 시간을 허비했다. 징계가 임박한 10월 말에야 권정오 위원장이 장휘국 교육감과 면담하고, 징계위가 열린 당일에는 징계를 철회하라는 늑장 성명서를 제출한 것이 전부다. 사태를 되돌리기에는 한참 모자란 대응이었다.

전교조 여성위원회와 광주지역 여성단체들은 광주교육청의 징계 탄압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이어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11월 13일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직위해제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배이상현 교사가 패소했다. 판사는 교육청 측의 논리를 받아들여 ‘성희롱’으로 규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배이상현 교사는 즉각 항소했다.

배이상현 교사는 징계를 강행한 광주교육청을 규탄하며 곧바로 소청할 뜻을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 전국도덕교사모임,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현을 지키는 교사모임 등은 광주교육청이 중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12월 23일 오후 2시에는 전교조 광주지부 주최로 배이상현 교사에 대한 징계 규탄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은 배이상현 교사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가 집행되는 날이기도 하다. 광주교육청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함께 연대하자.



## 변창흠·이용구 부적절, 구설수

# 실체 드러낸 문재인인의 ‘개혁’ 인사

김문성

12월 22~23일 네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장관 교체는 대중의 불만을 달래어 문재인인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다.

교체 대상이 이 점을 보여 준다.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지층에서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 집값 폭등과 그 대응 실패(오히려 조정)가 민심 이반에 결정적 구실을 했다.(엔지오 출신 인사를 새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실세 측근이자 현역 의원인 전해철이 내정됐다. 행안부는 선거 관리 주무 부처이자 최근 “검찰 개혁” 입법과 코로나 방역 덕분에 힘을 늘린 경찰을 지휘한다. 현 정권의 핵심 보루인 것이다. 전해철이 내년 재·보선(서울·부산 시장 포함)은 물론이고 내년 대통령 선거도 관리할 수 있다.

### 코로나 혼선

정부는 때마침 코로나19와 관련해 병상·의료진·백신 확보에서도 난관에 처해 있다.

백신 확보 실패에 관한 대통령, 국무총리, 관련 부처장들의 발언은 서로 충돌하고 계속 바뀐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백신 확보 시도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청와대가 묵살했다고 하고, 대통령은 자신의 백신 확보 지시를 관료들이 충실히 따르지 않았다고 말한다. 국무총리는 정부가 방심했다고 실토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병상 확보도 제대로 안 해서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숨지는 환자가 발생했다. 올 봄 대구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었다. 그때와 8월 휴가철 직후, 병상 부족 위험 신호가 이미 왔는데도 대책을 세워 놓지 않았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다른 나라의 수십 분의 1 수준인 확진자 규모를 ‘K-방역’의 자랑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그런 확진자 규모에서도 병실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죽는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공공의대 설립 문제로 의사협회·전공의들과 충돌했던 문재인 정부가 막상 공공병원 설립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 것이나 민간병원 병상 동원에 소극적인 것 등은 이 정부의 방역 치적 홍보가 거짓이었음을 보여 준다.

집값 상승은 그대로인데, 어설픈 추가 대책이 전월세 가격을 되레 올렸다. 게다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집값 상승이 일어나는 연세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 상태에서는 가계 대출을 함부로 억제하기도 어려우니 오히려 거품 위험은 더 커진다.

게다가 위기 모면용 인사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국토부 장관 내정자 변창흠의 망언과 거짓이 폭로되고 있다.

### 노동자 안전보다 정권 안전

변창흠은 세종대 교수 출신으로, 2000년대 중반 소위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불로소득 환수와 공공 개발 등을 주장했다.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에



변창흠의 구의역 김군 관련 망언은 이 정권 인사들이 산재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잘 드러낸다

게 발탁돼 SH(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 사장이 됐고, 문재인 하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됐다. 그러나 공기업 사장이 됐을 땐 부동산 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같은 대단찮은 것조차 실천하지 않았다.

SH 사장 시절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던 청년 노동자(‘김군’)가 안전 관리 부실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때 변창흠은 SH 공식 회의에서 사고를 김군 탓으로 돌렸다. 김군의 부주의 탓에 서울시 전체가 흔들렸다는 것이다. 박원순 책임론을 걱정했던 것인데, 정부 지지를 떨어질까 봐 코로나 감염자를 비난하는 요즘 친정부 인사들과 비슷하다.

또한 변창흠은 비정규직 전문인력을 뽑을 때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했지만 이내 나 몰라라 하면서 일부는 해고하고 일부는 영종한 업무 전환을 제시해 모욕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서민들을 멸시했다.

이밖에도 태양광 사업이나 SH 고위직 채용에서 친민주당 인사들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다.

변창흠은 하나마나 한 세 줄짜리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청문회 직전에 변창흠이 자기가 일했던 엔지오를 딸의 고입 스펙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국을 연상케 하는 일이다. 그런데 친여권 인사들의 대응도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변창흠만한 부동산 개혁가가 없으니 업무와 무관한 일로 기회를 빼앗지 말고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그런 논리로 임명해 제대로 된 개혁을 한 사례도 없거니와, 변창흠 자신도 SH·LH 사장 시절에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 며칠 사이에 경기도 평택 등 전국 건설 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벌어졌다. 이 현장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에 산재를 노동자 탓으로 돌리는 자가 과연 적합하냐는 항의가 당연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군의 동료 노동자들인 서울교통공

사 PSD1지회는 변창흠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군이 일했던 서울교통공사도 서울시 공기업이지만 넓게 보면 국토교통부 관할이다.

노동운동은 지금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이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지도자들을 달래려 임명한 인사가 역효과를 내게 생긴 것이다. 아쉽게도 12월 22일 오전까지 민주노총·정의당·진보당 지도부의 공식 논평은 없다. 정의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달라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조국 때처럼 민주당 변호회 힘을 싣고 있지는 않다. 정의당 원내대변인 장혜영 의원은 18일 변창흠의 사과를 요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22일 반걸음 더 나아가, “국민의 이해와 유가족의 용서가 전제될 때만” 장관 후보로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변창흠 지명 철회를 공개 요구했다. 진보당 청년 부문도 중앙당과 다르게 김군의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20일 자진사퇴(또는 청와대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정의당이 민주당과의 거리두기에 성공하려면 일부 지지층 이반을 감수하며 과감하게 정치적 도박을 감행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노동운동 전체에 도움이 되는 “선 넘기”이다.

### 문재인인의 포퓰리즘 전략, 난관에 봉착

문재인은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자신의 왼쪽(특히 엔지오 지도자들)을 향해 손짓을 보내지만, 변창흠 막말 논란은 이조차 만만치 않은 현실을 드러낸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민주화 운동이나 사회운동 리더 출신자들을 임명해 진보 진영의 지지를 얻어내려고 하지만 그인사들 다수는 이제 중간계급의 일부가 돼 있다. 세 세대 활동가나 기층 노동자들이 과거 운동 경력을 보고 현재 그들의 모순

을 너그라이 보아넘기기에는 객관적 현실의 모순이 너무 크게 다가온다.

가령 변창흠의 산재 발언은 이 정권 인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잘 드러낸다. 지금 노동운동은 합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기업주들은 강경하게 이 법에 반대한다. 문재인은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친기업 노선을 추구하면서 운동 지도자들의 협조를 받아 내는 식으로 하려 해 왔는데, 이런 포퓰리즘 전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과 과점된 경제 침체 때문이다.

또, 문재인은 여권 고위 측근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는 데서도 검찰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반감을 이용하려고 해왔다. 그러나 **검찰이 부패했다고 해서 부패의 정황 증거들과 직접적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는 여권 인사들이 정치적·윤리적·법적 책임을 모면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리고 위선도 선명하게 드러났다. 조국 수사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현 검찰 수뇌부에게 민주적 통제를 따르지 않는 항명 세력이라고 비난하더니, 막상 징계 사유로는 윤석열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있음을 제시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져서 힘을 분산시켜야 한다더니, 수사권·기소권에 수사 이첩권까지 있는 공수처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최근 문재인 지지율이 30퍼센트대로 떨어지고 부정평가가 60퍼센트에 육박한 주요 원인이다. 검찰이 대중에게 불신받는 기관이 아니라면 문재인 지지율은 더 곤두박질쳤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을 징계하려고 임명한 법무부 차관 이용구한테서도 문제가 터졌다. 임명 한 달 전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기사에게 가벼운 폭행을 한 일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이를 조직적으로 감싸고 은폐했다는 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경찰의 내사종결 조치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것과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는

기 때문이다. 이용구 사례는 문재인 “검찰 개혁”이 서민을 위한 것이기는커녕 권력자들에게나 유용한 것임을 보여 준다.

어찌나 다급했던지 문재인은 22일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등을 초청한 자리에서 윤석열의 불복으로 더 공공연해진 청-검 갈등에서 청와대를 지지해 줄 것을 대놓고 요구했다.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습니다.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 헌법기관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이 법원에, 공수처에 대한 헌법소원청구가 헌재에 계류돼 있다.

### 우파의 반사이익 얻기를 막으려면

문재인이 위기에 빠지자 우파 야권 연대 움직임이 시작되는 듯하다. 안철수가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안철수는 자신이 정권 교체의 디딤돌이 되겠다고 했다.

안철수와 국민의힘 모두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위선에 질려 등을 돌리는 중도층을 노린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실패 등으로 일부 반사이익을 얻고는 있지만, 문재인에게서 이반한 다수는 “원조 부패” 국민의힘에게 곧바로 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안철수는 자신이 중도층을 끌어들이 수 있다고 보고 반문 연대를 주도해 보겠다는 것이다.

애초에 개혁에 반대한 부패 원조들이 개혁 배신에 대한 대중의 실망에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역겨운 일이다. 이를 위해 그들은 못지 않은 위선과 야비한 책략을 부릴 것이다. 안철수는 4년 전 문재인보다 먼저 박근혜 퇴진을 주장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권력을 노린다. 그때도 지금도 알팍한 기회주의 술수를 부린다. 여기에 최근 검찰이 (월성 핵발전소 수사로) 우파의 지지를 얻으려고 해서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결국 공식 정치 안에서 주류 양당이 날카롭게 분열해 있고, 개혁 배신에 대한 실망이 어느 세력에 의해서도 제대로 대변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 불안정도 커지고 있다.

그 와중에 역겨운 우파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면 **그것은 민주당이 감히 진보를 참칭해 오며 개혁 염원을 배신해 우파의 사기와 자신감을 올리는 것에 일조했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이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와 철저히 선을 긋는 선명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이유다.

문재인이 약 4년간 보인 행태는 우파에 맞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것에 진보성이 거의 없고, 민주당 정부와 개혁 동맹을 맺는 전략이 실패했음을 또 다시(김대중 — 노무현에 이어) 드러냈다. 노동운동이 가짜 진보에 환멸감을 느끼고 있는 진정한 진보(개혁) 염원 대중을 설득하려면 이 쓰디쓴 진실을 인정하고 문재인과 매번 날카롭게 대립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 알맹이 빠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전주현

지난 12월 15일, 문재인 정부는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2021년~2025년 적용, 이하 4차 계획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새로운 “저출산 대책”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노동계급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다.

출산·육아 부분에서 약간의 개선은 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바우처는 6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고, 아동 출생시 200만 원 어치 바우처가 제공된다.

또한 2022년부터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30만 원(2025년까지 월 5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의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하지만 영아수당은 완전히 새로운 지원은 아니다.

현재 0~1세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47만 원)가 지원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0세 월 20만 원, 1세 월 1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2022년부터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통합돼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영아수당으로 일괄 지급된다. 그러면 가정 양육을 하는 경우에만(현재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0세가 3.4퍼센트, 1세가 36.6퍼센트에 불과하다) 10~15만 원 정도 지원금이 늘어나게 된다.

육아휴직 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각각 최대 300만 원)를 지원하는 방안이 신설된다. 그 외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한액은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 불충분

우파들은 이런 계획을 두고 “현금 살포 정책”이라며 불멘소리를 한다. 하지만 월 평균 92만 원이 소요되는 영유아 양육비(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2019)를 고려하면, 정부 지원을 탈탈 털어도 한참 모자란다. “누구나 행복하게 아이를 키우는 삶”은 연감생심 기대하기 어렵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과 상한액이 인상됐지만, 여전히 필요 수준에 건져 턱없이 부족하다.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저임금(월 179만 원)에도 못 미치는 육아휴직급여 때문이다. 육아휴직급여 최대 금액 월



생색내기 문재인 정부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삭감했다

150만 원으로 3~4인 가족이 아기를 키우며 어떻게 생계를 꾸릴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육아휴직제는 그림의 떡이다.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4차 계획안에 “예술인·특고·비정규직·자영업자로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기는 했다. 그러나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여러 제약 요소를 뒤 특고 노동자 상당 수를 제외시키는 등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

임신한 여성 노동자들은 육아휴직은커녕 온갖 차별 대우와 해고 압박에 시달린다. 여성가족부의 ‘2019년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노동자 10명 중 6명이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 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육아휴직제를 강화해야 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으로 여성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는 한편,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늘려야 한다. 또한 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퇴사를 압박하는 기업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 “촘촘한 돌봄 체계”?

문재인은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것이 여성의 삶 또는 여성의 일을 억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가 책임 보육”을 약속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40퍼센트 확충 공약을 내 걸었지만, 결과는 지지부진하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약 12퍼센트, 이용률은 약 17퍼센트에 지나지 않는

다(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국공립 유치원까지 포함해도 공공 보육시설 이용률은 25퍼센트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7퍼센트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이번 4차 계획안에 “국공립 등 공보육 이용률 50퍼센트 확충”으로 목표를 상향했다. 하지만 기만적이게도 2021년 예산안에서 보육 예산을 삭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도 20.6퍼센트나 줄였다. 이런 추세라면, 문재인인의 약속은 공문구가 될 공산이 크다. 말로만 생색내는 문재인인의 행세가 위선적인 이유다.

사실 “공보육 이용률 50퍼센트” 목표는 진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전제한 것도 아니다. 현재 직영 국공립 어린이집은 2퍼센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인데, 정부가 민간위탁 방식을 더 늘릴 공산이 크다.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은 ‘온종일 돌봄’ 확충 방안도 문제적이다. 2022년까지 학교 돌봄 34만 명, 마을 돌봄 19만 명을 수용하고,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 연계”와 “지역 돌봄 모델 발굴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돌봄 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방안과 맞물려 진행될 듯하다. 돌봄 교실 지차제 이관 계획은 공적 돌봄에 대한 정부 책임을 줄이고, 값싼 노동과 학교 노동자들의 고통 분담으로 돌봄 서비스를 패우려는 조처다. 이 계획은 돌봄전담사들의 파업 투쟁으로 제동이 걸렸지만, 정부는 지자체 이관 법안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약속”을 스스로 역행하며 돌봄 서비스 시장화를 확대하려 한다.

문재인 정부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마련했다고 거창하게 떠들 뿐,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거나 유아 교육·보육 시장을 축소·규제하는 데 열의가 없다. 역대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기업 지원과 국방비 증액을 더 중시한다.

## “워라밸” 파괴자는 문재인 정부다

4차 계획안은 ‘저출산’ 문제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 성차별적 노동시장, 돌봄 공백, 비싼 주택 가격” 등을 지목했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이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거의 내놓지 않았다. 경제 위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여성 실업이 증가하고,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오히려 정부 자신이 노동 개악과 임금 공격 등으로 노동자·서민과 청년들을 더욱 궁지로 내모는 데 앞장서고 있고, 부동산 투기 촉진으로 주택 가격 폭등을 야기시켰다. “워라밸”을 파괴할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4차 계획안의 ‘성평등 노동권 보장’ 방안도 알맹이가 없고 초라하다. 기업의 성별 고용·임금 정보를 공시하는 ‘성평등 경영 공표제’와 ‘채용 성차별 모니터링 강화’ 등을 제시했는데, 강제성이 없을 뿐더러 성차별 행태를 규제할 방안도 없다. 문재인인의 대표적인 여성 공약이던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문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사실 정부가 “채용절차 공정성 강

화”를 운운하는 것은 위선의 극치다. 2018년에 은행권의 노골적인 채용 성차별 문제가 공론화됐지만, 정부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업을 전수 조사하라는 여성·노동 단체들의 요구를 거부했고, 여성가족부는 채용 성차별 논란을 빚은 몇몇 기업과 “유리천장 깨기” 자율 협약을 맺고 “성평등 우수 기업”으로 홍보해줬다. 정부가 면죄부를 준 셈이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권리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열의가 없다. 출산을 증대를 위해 여성 대중의 염원을 배신하고 낙태죄 유지를 고수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도 한 예다.

문재인을 비롯해 모든 지배계급은 “인구 감소는 재앙”이라며 ‘저출산’으로 노동력 인구와 징병 대상자가 감소하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 하지만 지배자들은 낙태죄 유지로 출산을 강요하면서도 양육·돌봄 부담은 책임지지 않는다. 여성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약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민간 업자들과 시장 원리를 이용해 그 부담을 대부분 개별 가정(특히 여성)에 떠넘긴다. 지배자들이 노동력 재생산 부담을 노동계급의 여성과 남성에게 전가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사회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왕창 걷어 양육과 돌봄 사회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질 좋고 값싼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또,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대량의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해 주택난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려면 체제와 기업 살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문재인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해야 한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연말 특별사면 예정:  
**이석기 전 의원이 석방돼야**
- ★ ‘저출산·고령화’ 담론 비판:  
**인구 감소는 과연 재앙일까?**
- ★ 대북전단금지법,  
**어떻게 봐야 할까?**
- ★ 코로나로 교육 불평등 늘어나는데:  
**오히려 교원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동교회 ☐ 기타 ) \_\_\_\_\_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solidarity.org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이름 \_\_\_\_\_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휴대전화번호 \_\_\_\_\_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이메일 \_\_\_\_\_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기간 ☐ 1년 ☐ 2년 ☐ 2년 이상 ( ) 년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ws@wspaper.org



# 국가보안법은 통째로 폐지되어야 한다

김지윤

제정된 지 올해로 72년이 된 국가보안법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적 권리를 체계적으로 가로막는 대표적 악법이다.

최근 <경향신문>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올해 “10대 걸림돌 판결”의 하나로, 진보당 행사에서 민중가요인 ‘혁명동지개’를 부른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에 해당한다며 안소희 전 파주시의원과 홍성규 전 진보당 대변인 등에게 징역형을 확정된 대법원의 판결을 꼽았다.

이보다 앞서 1월 대법원은 전교조 교사 4명에게 이적표현물 소지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고, 6월과 8월에는 각각 청학연대와 청학본부 간부들에게 보안법 위반 유죄를 확정했다. 9월 범민련 남측본부는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범민련 활동을 문제 삼으면서 보안법 위반 사건 조사를 이유로 사무처장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은 보안법 위반과 내란선동 혐의로 올해로 벌써 8년째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런 일들은 국가보안법이 과거의 유물이 아님을 보여 준다.

보안법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과 비스마르크 시절 독일의 ‘사회주의자 탄압법’을 모델로 만들어졌다. 이승만 정권은 형법과 민법보다 먼저 국가보안법을 서둘러 제정했다. 4·3 제주항쟁, 10월 여순항쟁 등 잇따른 민중봉기에 위기감을 느꼈던 것이다. 이승만 정권은 보안법을 이용해 정당과 사회단체들을 해산하고 관련 인사들을 탄압했다.

군부독재 정권이든 민간 정부든 역대 정부들은 체제 수호를 위해 노동운동의 가장 선진적인 부위와 체제 내부의 반대자들을 제거하는 무기로 국가보안법을 활용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들은 여전히 보안법 수호를 외친다. 집권시 마찬가지로 보안법 구속자를 양산한 민주당이 우파와 차이가



경찰이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책들. 국가보안법은 체제 비판적 주장과 활동 일체를 단속해, 노동계급 전체의 자유를 제약한다

있다면, 말로는 보안법이 좋은 법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안법에 따르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일체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 폭력 행위가 전혀 없어도 “찬양·고무,” “선전·선동”을 이유로 처벌할 수 있다(7조).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한국의 부정적 측면만 강조했다는 이유, 사회의 모순과 비리를 부각했다는 이유, 혹은 자본주의 한계성을 강조했다라는 이유 등으로 구속됐다. 그래서 서적, 그림, 사진 등 온갖 표현물이 보안법 처벌 대상이 됐다. 체포된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거나 일부는 사형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 왔다.

보안법은 구속되고 투옥되는 피해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반체제적 정치 주장을 펴고 이에 기초한 정당을 건설하는 일을 가로막음으로써 노동계급 전체의 정치적 자유를 억제한다. 이 나라 지배자들 일반이 보안법을 이용해 좌파를 탄압하고, 그럼으로써 노동자 운동이 반체제적 정치로 조직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

여러 국제 인권 기구들이 한국 정부에게 이 법을 폐지하라고 권고했지만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모든 정부가 이를 무시한 것은 지배자들의 효과적 통제(체제 수호) 무기를 결코 스스로 내려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안법에 따른 이해관계가 특정 정당이나 공안기관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다.

## 손질이 아니라 폐지

민변은 올해 입법과제 중 하나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꼽았다. 민변은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거나 폐지한다 하더라도 ... 반통일적, 반인권적, 비민주적 위험적 체제로서의 역할이 바뀌지 않는다”면서 “일부 개정되어서는 안 되고 전면 폐지되어야만”한다고 주장했다.

보안법 2조(반국가단체)는 가장 핵심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모든 조항들이 반국가단체를 전제로 범죄를 정의하기 때문이다. 판례 등은 반국가단체(북한 국가가 대표적이다)와 이적단체를 그 목적성에 따라 구분한

다고 하지만 실상은 모호하다.

검찰은 1980년대 전국민주학생연맹,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을 애초에 반국가단체로 기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이적단체로 봤다. 1990년대에 벌어진 영남위원회 사건에서도 검찰은 애초 반국가단체로 기소했다가, 이적단체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런 일들은 보안법이 엄밀한 법적 규정보다 노동계급 운동의 결사의 자유를 억누르고 가로막는 것을 더 중시함을 보여 준다.

7조가 규정한 ‘국가변란 선전·선동’은 어떤가? 이 조항은 노태우 정권이 개악한 것인데 “기존의 북한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사회주의혁명이론”에 기초한 세력들을 겨냥하고 있다(《국가보안법 이해》, 황교안). 보안법이 단지 친북 세력만을 겨냥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에 올라가 있다. 최근 민주당 의원 이규민 등이 국가보안법 개정(7조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진보진영 내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압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보안법을 개정하리라는 기대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역대 민주당 정부들이 모두 개정 추진 시늉만 하면서 생색을 내고, 진보진영의 발목을 잡았을 뿐 보안법 폐지 염원을 번번이 배신해 왔음을 잊어서 안 된다. 게다가 개정안 제안자 명단을 보면, 중진이라 할 수 있는 의원이 없어 민주당 차원에서 힘을 싣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자신이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였던 전 대통령 김대중도 보안법에 손대지 않았다. 1989년 김대중의 평민당이 야당일 때 대체 법안으로 내놓았던 민주질서수호법에는 보안법 제7조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민주질서위해죄가 포함돼 있었다. 당선 이후에도 북한이나 경제·정치 갈등 등을 이유로 보안법 폐지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폐지만 안 한 게 아니라 김대중 정부는 보안법을 적극 활용했다. 집권 첫해에만 400명 넘게 보안법 위반으로 기

소했다. 당시는 1998년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 해고와 각종 신자유주의 조치에 저항하던 운동이 강력히 벌어지던 때였다. 결국 김대중 정부 집권 5년 동안에만 1100여 명이 기소됐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반국가단체의 수장 격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보안법을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던 노무현 정부에서 여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도 보안법을 단 한 글자도 건드리지 않았다. 당시 자민통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보안법 폐지 운동에 큰 열의를 보였는데, 노무현 정부는 보안법 폐지 염원을 이용해 당시 비정규직 악법에 반대하는 운동과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등을 분열시키고 기만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정부도 국가보안법 활용을 포기하지 않았다. 전 정권에서 기소된 보안법 사건들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기소가 유지되고 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는 경찰·검찰과 법원이 본질적으로 체제 수호적 기관이고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탄압하는 데에서 한통속임을 보여 준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허울좋은 “권력기관 개혁”이 노동계급의 실질적 정치 자유를 위한 것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허상임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지난 10여 년간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자리잡아 오면서 보안법 적용도 예전만큼 쉽지 않아졌다. 여기에는 (민주당 정부들의 꾀죄죄한 집권 성적보다는) 노동자 운동이 끊임없이 저항하며 (노조든 정당이든) 자신의 조직들을 만들고 성장해 온 것이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됐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조차도 그 알맹이는 노동계급의 사상과 표현, (정당과 노조 모두에서) 결사의 자유이고, 그 동력은 노동계급의 자력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늘리려면, 노동계급의 대중조직과 운동이 성장해야 한다. 자본가 계급의 그 어떤 부분에도 의존하지 말고 정치와 투쟁 모두에서 더 강력해져야 한다.

##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는 삭감, 시의원 세비는 인상

### 서울시의회 의 엇나간 우선순위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코로나 위기 한가운데에서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를 전액 삭감한 서울시의 ‘역주행’ 예산안에 항의해 왔다.(관련 기사: 본지 345호 ‘코로나 위기에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 예산 삭감이 웬말’)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결국 서울시가 낸 예방접종비 전액 삭감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각종 보

건·방역 예산을 늘려도 시원참을 때에 말이다.

예방접종은 각 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돌봐야 하는 아이돌봄 노동자들과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아이들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다. 이런 필수 예산을 희생시킨 것은 얼토당토않은 일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1년에 한 번 3만 원에 불과한 아이돌봄 노동자 독

감예방접종비는 몽땅 삭감해 놓고, 시의원 의정활동비는 월 10만 원 인상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 준다.

### 벼룩의 간 내어 먹기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으로 고통받아 왔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가정 방문이 어려워져 거의 실직 상태로 내몰리고 임금이 크게 줄었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던 알량한 지원조차 박탈해 버린 것은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항의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예산안이 책정되기도 했으나, 결국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무참히 삭감됐다.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묻는다. “노동자들에게는 고통 분담을 얘기하더니 ... 자신들의 임금과 활동비는 척척 인상하는 서울시의회는 누구를 위한 곳인가?”(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보도자료)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코로나19로 삶이 무너진 시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예산”이라고 항의하며 예산안 표결에 불참했다. “사회적 약자와 서민, 취약한 노동자들이 처한 생존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간과된 예산이라고 항의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는 “성평등,” “노동존중” 말잔치 그만하고, 보건·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봄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고통 전가를 중단하라.

최미진



#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배한 2020년 세계 정치

올 한 해의 국제 정세의 특징을 **조셉 추나라**가 짚어 본다. 조셉 추나라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자 혁명적 좌파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이다. [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넣은 것이다. 지면에 실지 못한 주석은 온라인 기사에서 볼 수 있다.

팬데믹 하에서 1년은 긴 시간이다. 최초의 코로나19 희생자들이 나온 지 12개월하고도 조금 더 지났다. 이 글을 쓰는 현재, 세계 코로나 사망자는 150만 명에 이르렀고 북반구 겨울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할 공산이 크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 악화에 시달렸고 때로는 “만성 코로나”라고 불리는 각종 당황스러운 증상에 오랫동안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 실직, 수입 감소를 겪고 심지어 사랑하는 이를 잃고 비통함에 젖기도 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정치를 지배했고 각종 시사 쟁점을 압도했으며 수십억 명의 일상 생활을 뒤바꿔 놓았다. 코로나19로 가득 찬 뉴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주요한 두 사건(지난 여름 세계적인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과 미국 대선)은 부분적 예외였을 뿐이다. 더욱이 둘 모두에 팬데믹이 끼친 영향이 깊게 아로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새해가 가까워지는 지금, 일각에서는 정상 시기의 외양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자라고 있다. 단지 백신 개발로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넘어 팬데믹 이후의 정치 판세에서 중도가 복원되고 자본주의가 안정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포퓰리즘”(대중적 지지를 얻으려 하는 좌우의 급진 정치에 붙이는 딱지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흔하다)이 팬데믹이라는 시험을



코로나19는 최소 17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국제 정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11월 미국 텍사스에서 코로나로 숨진 사람들을 운반 중인 모습

통과하지 못했고, 이전까지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류 정치권의 복귀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 것이다. 12월 초 현재, 트럼프의 맞수 바이든은 오바마 정권 시절 국내외에서 미국 기업의 이익을 방어하는 데 앞장섰던 신자유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내각을 꾸리고 있다. 영국에서는 도미닉 커밍스가 11월 보직에서 쫓겨났는데, 그는 보리스 존슨 정부 안에서 우익 포퓰리즘의

핵심 주창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커밍스의 협력자인 총리실 공보국장 리 케인도 함께 쫓겨났다. 키어 스타머는 노동당 대표로서 좌파 제러미 코빈을 대신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코빈주의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의도를 올 가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한편 독일에서는 총리 앙겔라 메르켈의 중도 우파 정당 기민당의 지지율이 팬데믹 초기 30퍼센트에서 6월 40퍼센트로 올랐다. 같은 기간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지지율이 떨어졌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

롱은 아주 순한 중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1년 전 노란조끼 시위와 대규모 파업들을 버텨 냈고 국정 지지율이 49퍼센트까지 오르기도 했다. 가을이 되자 그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공식적 이슬람 혐오를 훨씬 강화하고 더 가혹한 치안 정책을 관찰시키려 했다(거리에서 그에 대한 반대가 없지는 않았다). 스페인에서는 네 차례의 총선에도 정부가 구성되지 못하자 급진좌파 정당 포데모스가 스스로를 중도 좌파인 사회당(PSOE)에 얹어매기로 합의하고 연립정부에 참여해 많은 지지

자들에게 배신감을 안겨 줬다. 심지어 만성적으로 불안정한 이탈리아에서도 중도 좌파인 민주당이 극우인 동맹당을 밀어내고 연정의 하위 파트너가 됐다. 이 연정은 오성운동이 주도하고 있고 변호사 출신인 주세페 콘테가 총리를 지내고 있으며, 2020년 4월에 콘테의 국정 지지율은 71퍼센트로 올랐다.

그러나 중도의 기반이 탄탄해지는 듯 보이는 것은 외견 상으로만 그럴 뿐이다. [정치] 양극화와 위기를 추동하는 힘이 더 깊기 때문에 이런 경향은 오래 유지되기 어려울 듯하다.

## 끝이 보인다?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에 직면한 국가들은 자본주의 논리(끊임없는 이윤 창출과 경쟁적 축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가들의 대응 방식이 똑같다거나 생명과 이윤이 정확히 같할 관계였던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적 해결책이 부재한 가운데, 방역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나라들은 자국민에게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때로는 권위주의적 수단을 동원해) 시행하고 이후 검사 및 확진자 추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나라들이었다. 그래서 중국은 초기에 경제 타격을 입었지만 V자형 회복 비슷한 것에 근접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에 속하게 됐다.

이런 경로를 따를 수 없었거나 그럴 의지가 없던 국가들의 경우, 경기 후퇴와 사망률 사이의 관계는 각종 요인(나라의 크기와 지리적 구조, 인구 구성,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태도, 확진자

증가에 대한 정부 대응의 신속성 등)에 따라 달라졌다.

이곳 영국은 특히 사태가 심각한 경우에 속한다. 영국 정부는 2020년 봄에 대응에 나섰지만 확진자가 빠르게 치솟아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것이었다. 그러다 성급하게 외출제한령을 완화했으며, 이후 외출제한령을 재도입할 지를 두고서 혼선을 빚고 검사 및 확진자 추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공중 보건 문제 대응을 민간 외주화에 의존한 결과, 사망자 수와 경기 후퇴가 특별히 심각했다.

### 혼선과 혼란

미국의 경우, 팬데믹 대응은 매우 혼란스럽고 불균등했지만 경제적으로는 더 양호했다. 하지만 트럼프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 수치는 여전히 높은 데다 고용 증가와 경기 회복도 점차 악랄이 다한다는

증거가 보이고 있다.

새로 개발된 백신이 이런 공포 드라마를 어느 정도까지 끝낼 수 있을까?

임상 시험은 놀랄 만큼 성공적이지만 백신을 개발하는 것과 바이러스를 무찌를 만큼 면역력을 획득하는 것 사이에는 여전히 상당한 간극이 있다. 경영 컨설턴트사 맥킨지는 미국에서 “팬데믹의 역학적 종식”은 2021년 가을 또는 겨울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조차도 백신이 광범하게 보급된다는 가정 하에서다. 《랜싯》에 실린 최근 기사는, 백신이 접종자 80퍼센트에게 효과를 낸다고 가정하면 인구의 75~90퍼센트가 면역력을 획득해야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여기에는 백신을 맞은 이들뿐 아니라 코로나19를 앓고서 회복돼 면역력을 갖게 된 이들도 포함된다. 또, 임상 시험 결과들을 보면 백신은 80퍼센트보다 높은 효과를 내는 듯하다. 그럼

에도 《랜싯》 저자들이 말한 “백신에 대한 망설임”이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영국인들은 85퍼센트가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는데 이 수치대로라면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데에 필요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독일과 미국에서는 이 수치가 67퍼센트로 떨어지고 프랑스에서는 59퍼센트에 불과하다.

### “백신 민족주의”

더욱이 팬데믹은 세계적 문제다. 백신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전 세계인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지적 재산을 양보하여 복제와 생산을 허용할 가능성은 적다. 2020년 9월이 되자 세계 인구의 13퍼센트만을 차지하는 부유한 나라들이 향후 생산될 백신의 51퍼센트를 선점했다. 이들 외에도 특히 인도처럼 국내에 백신을 대량 제조할 기반 시설을 갖춘 나라들은 백신에 접근

할 수 있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그 외의 나라들, 최빈국은 물론이고 중진국이라 할지라도 급증하는 “백신 민족주의”의 패배자가 될 공산이 크다. 백신 보급 문제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현재까지 임상 시험을 거친 백신들은 냉장 상태, 어떤 경우에는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해서 저온 유통 체계가 필수적인데 많은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세계보건기구는 지금도 해마다 저온 유통 체계의 미비로 해마다 150만 명이, 피할 수도 있었을 죽음을 맞이한다고 추산한다. 여기에 더해 면역력의 지속성이라는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어쩌면 이 때문에 백신을 반복적으로 접종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 탓에 바이러스가 고착화될 수 있고 백신 접종이 가능한 국가에서도 다시 바이러스가 유행할 수 있다.



## 삼중 위기

팬데믹은 이전에 필자가 말한 “삼중 위기”의 한 측면일 뿐이다. 팬데믹은 더 광범한 생태적, 경제적 혼란과 떼어 놓고 볼 수 없다. 두 혼란은 각각 장기적 추세의 반영이고 이제는 서로를 강화하고 있다. 자본주의 장기 침체 국면은 단지 경제 위기를 반복적으로 야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 대신 취약한 생태계의 더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자본을 떠민다. 한편 생태학적 위기는 파괴적인 기상 패턴, 기아, 산불 등을 통해 갈수록 자본주의의 재생산 능력을 손상시킨다.

이번 팬데믹은 이 두 장기적 추세를 결합시켰다. 코로나19는 동물들 사이에서 인간 사회로 들어온 것인데, 자본이 자연을 침투하고 상품화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는 다시 장기 침체 속에서 새로운 경제 위기 국면을 촉발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위기를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한 가지 불길한 조짐은 2020년 말 가금류 사이에서 퍼진 조류독감인데, 조류독감도 중간 장벽을 넘어 인간을 감염시키고 팬데믹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바이러스다.

현재 국면의 자본주의가 상대적으



올해 그리스에서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활약으로 파시스트 황금새벽당을 위기에 빠뜨렸다. '인종 차별·파시즘 반대 운동(ΚΕΕΡΦΑ)' 시위대

로 취약하기에 설령 팬데믹이 찾아들더라도 2020년의 경기 침체는 향후 수년 동안 이 체제에 상흔을 남길 것이다. 자본주의 장기 침체의 뿌리는 궁극적으로 1970년대에 시작돼 해소되지 않은 이윤율 위기에 있다.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자들이 반복적으로 지적했듯이 이윤율을 높은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수익성이 낮은 자본을 대규모로 파괴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위험이 커질 때마다 국가와 그와 연계된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위기를 피하려 든다. 그 결과 기저에 깔린 문제의 해결이 미뤄지고 자본

주의가 신용 확대에 더 의존하게 되고 금융이 더 취약해진다. 2020년 국가와 중앙은행의 어마어마한 개입은 이런 서사의 일부였고 그 결과 다시금 뜻밖이지근한 경제 성장을 한 차례 예고하겠지만 결국 그마저 새로운 위기에 꺾일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정부가 지출을 줄이려는 첫 시도에 나서고 있다. 공공부문 임금을 동결하고, 건축과 세금 인상으로 2024년까지 270억 파운드어치[40조 원]를 줄이려 한다. 여기에 대규모 실직(특히 소매업에서)으로 인한 고통이 더해진다.

## 취약한 중도

이런 것이 국제 정치에 함의하는 바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패턴이 자리를 잡았다. 자본주의가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반시설을 유지하고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수준보다도 더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노동계급이 팽창한다. 불평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지배계급은 권력을 지키고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 갈수록 억압적 조치에 기대고, 유착과 부패가 갈수록 두드러진다. 그 결과 2019년에 일련의 대중적 분노가 폭발했다. 팬데믹과 함께 잠시 가라앉았던 이 패턴은 2020년 가을이 되자 되살아났고, 벨라루스, 볼리비아, 나이지리아, 태국, 과테말라에서 시위가 터져 나왔다. 이제 코로나19는 반란을 추동하는 요인이 됐다.

선진국에서는 정부들이 초기에 외출제한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내릴 때 종종 지지율이 오르곤 했다. 하지만 여기서도 방역 실패는 지지율을 갉아먹는 효과를 냈다. 영국에서는 정부의 코로나 대처에 대한 신뢰도가 2020년 4월 69퍼센트에서 11월 말 38퍼센트로 추락했다. 응답자의 13퍼센트만이 정부 대처가 “호란스럽고 일관되지 못했다”는 데에 이견을 보였다.

국정 실패와 대중적 반발의 수준은 정부의 정치 성향(“중도”나 “포퓰리스

트”나)과 단순하게 조응하지는 않는다. 《뉴 레프트 리뷰》 편집장 수전 왓킨스가 실례를 들어가며 보여 줬듯이 페루(중도 우파 정부), 스페인(중도 좌파가 이끄는 연정), 벨기에(자유주의 정당이 이끄는 연정) 정부들도 “포퓰리스트” 정부들 만큼이나 코로나19 대처에 실패했다. 코로나19 대처 실패는 트럼프의 몰락에 기여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방역에 실패한] 브라질의 [극우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나 인도의 [강경 우파 총리] 나렌드라 모디가 곧 몰락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 “포퓰리스트”의 몰락?

“포퓰리스트”들이 선거에서 패배한 경우에도, 바이든 같은 인물들이 펼칠 이런저런 형태의 신자유주의 통치로는 안정성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심각한 정치 양극화는 이전 세대 정치인들(빌 클린턴, 조지 부시, 토니 블레어, 데이빗 캐머런 등)이 발전시킨 신자유주의 컨센서스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다. 체제 위기가 훨씬 더 깊어진 현 국면에서 그 후예들이 다시 정치적 방향타를 잡는다고 해서 이런 경향을 역전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더 가속시킬 것이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미국에 관해 대선 직후에 이렇게 주장했다. “트럼프의 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이

들—현재 물망에 오른 이들은 톰 코튼, 조시 홀리, 니키 헤일리, 테드 크루즈다—은 복수심에 불타는 트럼프 열성 지지자들에게 앞다퉂 먹잇감을 던질 것이다. … 공화당원들 사이에 퍼진 ‘성난 군중’ 정서는 더 위험한 수준으로 반(反)민주적이고 폭발적이 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설상가상으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가 더해진다. 이 글을 쓰는 현재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이후 서로 맺을 관계에 대해 합의에 도달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런 결과는 부분적으로는 존슨 정부의 무능함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정치적 쟁점들도 작용했다. 집권 보수당 내 대체식 신자유주의 추종자들과 정부의 경제 개입을 추구하는 “주권주의자들” 사이의 긴장도 그중 하나다. 또, 기업가들이 우려하는 혼란을 피해야 한다는 염원과 [그런 혼란을 감수하고 서라도] 존슨이 자신의 국수주의적 수사를 지키려고 하는 것 사이의 긴장도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영국이 자신들의 규제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한사코 막으려 한다. 하지만 동시에 유럽연합 내에도 런던을 유럽의 금융 허브 지위에서 끌어내리려 하는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자들과, 강력한 자국 제조업의 시장 확보를 더 우선시하는 독일의 메르켈 같은 자들 사이에 긴장이 있다.

## 급진좌파

계속되는 정치 양극화는 사회주의자들에게 두 가지 도전을 제기한다. 첫째는 급진적 우익 세력에 맞서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치 지형의 일부로 자리잡았다. 2020년의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은 우익에 반격할 가능성을 보여 줬다. 이런 역동성을 이용해서,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반대하고 극우 네트워크의 성장을 가로막을 조직을 강화하려 해야 한다. 위기와 함께 국가에 의한 인종차별도 심각해지는데 이는 동시에 극우에게 자양분을 제공한다. 여기에도 반대해야 한다. 이번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에 실릴 페트로스 콘스탄티누 인터뷰의 핵심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 이 인터뷰는 그리스 파시스트 조직인 황금새벽당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다룬다.

현재 위기가 제시하는 시험을 통과해 보상할 수 있는 사회주의 좌파를 건설할 방법을 찾는 것도 만만찮은 과제다. 수년 동안 급진화 물결이 거둬낸 결과와 사회주의 정치가 재부상했다. 이런 흐름은 그리스에서 시리자의 부상, 스페인의 포데모스, 미국의 버니 샌더스와 미국민주사회주의자들(DSA)의 부상, 영국에서 코빈이 노동당 지도권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본질적으로 좌파 개혁주의 프로젝트로, 국가 권력을 [선거로] 획득해서 자본주의를 개혁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들은 자본주의 국가의 성격, 체제가 용인하는 급진적 개혁의 한계, 선거주의의 현실에 부딪혔다.

시리자는 집권했지만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자본가 세력들에 직면하여, 그리스에 긴축을 부과하라는 요구에 굴복했고 이후 선거에서 패배했다. 포데모스는 분기탱천한 아웃사이더들의 정당에서 사회당의 연정 하위 파트너로 변신했다. 한때 지지자들에게 사회당을 직업 정치인 “카스트”의 일원으로 보고 경멸하라고 가르쳤던 그 당이 말이다. 미국에서는 샌더스와 그의 협력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등이 민주당 지도부의 포로 신세가 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 성적이 상대적으로 초라하자 득달같이 이들을 비난했다.

이곳 영국에서 노동당 좌파는 코빈이 2019년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한 이후 공격받고 있다. 노동당 대표 스타머는 한심한 보수당 총리 존슨을 상대할 때는 대단히 무능하지만 노동당 전 대표 코빈을 공격할 때는 훨씬 기고만장하다. 코빈은 한때 노동당 당원 자격을 정지당했다. 유대인 혐오의 심각성이 “당 안팎의 정적들에 의해 정치적 이유로 과장”됐다고 한 발언이 그 사유였다. 코빈의 발언은 그가 당대표일 때의 노동당을 조사한 ‘평등인권위원회’(EHRC) 보고서의 발표를 두고 한 말이었다. 그 보고서는 [코빈이] 유대인

혐오자라는 비방의 최신 양태로, 이스라엘 비판을 [유대인 혐오로] 깎아내리고 국제주의 좌파(팔레스타인인들의 대의를 지지하는 것은 그런 좌파를 가려내는 중요한 시금석의 하나다)를 약화시키는 데에 일조한다. 막후 협상과 코빈의 추가적 후퇴로 코빈의 당권은 회복됐지만, 여전히 스타머는 코빈을 노동당 의원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결국 코빈은 무소속 의원으로 의회에 출석하게 됐다. 사태는 마치 [부조리하고 음울한] 카프카의 소설처럼 전개돼, 노동당 당원들은 당원 모임에서 코빈에 연대를 표하는 것은 고사하고 코빈을 언급만 해도 자격 정치 위협을 받고 있다.

### 원칙 있는 대응 필요

EHRC 보고서가 쳐 놓은 이런 함정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좌파가 팔레스타인 지지를 원칙적으로 방어하고, 시온주의[이스라엘의 건국 이데올로기] 반대를 유대인 혐오와 뒤섞는 것과 대결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노동당 좌파는 이런 대처를 발전시킬 수 없었고 많은 경우 당의 단결을 더 중시했다. 이것은 굴복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일례로 저널리스트 폴 메이슨은 EHRC 보고서에 대한 코빈의 반응을 비판했고 노동당과 감히 단결을 고민하는 사람은 모두 “네오 스탈린주의 종파”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다른 이들은 당에 남아서 싸울 것을 다짐하지만 그런 투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지는 조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이들은 서서히 노동당에서 이탈하기 시작했고, 4~11월 사이에 (심지어 코빈의 당원 자격이 정지되기 전부터다) 약 5만 명이 탈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경험들이 함의하는 바는 선거 제도를 통한 국가 권력 획득을 우선시하는 노선은 일정 시점에 이르면 좌파의 성장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다. 선거를 전술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든 그 시도는 선거 바깥 영역에서 투쟁을 건설하는 데 종속돼야 한다고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역설해야 한다. 코빈주의를 집어삼킨 이 재앙을 닫고 새로운 정당이 생겨난다면 그 당은 이런 관점을 견지해야만 노동당식 개혁주의가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좌파를 혁신하는 데 필요한 투쟁들을 강화시키려면, 자본주의 한계 안에서 사회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궁극적으로는 체제 전체를 교체하려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중핵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 만큼 혁명적 사회주의 전통을 발전시키고 혁신하는 것은 깊어가는 위기에 대처하는 데서 핵심적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주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169호  
번역 김중환



# 코로나19 발생 1년 팬데믹, 자본주의, 불평등



겨울철 대유행으로 서울역 선별검사소 앞에 줄을 선 시민들. 병상 부족으로 수도권에서는 확진 이후 입원도 못하고 죽는 이들이 늘고 있다

## 팬데믹은 가뜰이나 심각해지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 장호중

자본주의가 만들어 내는 불평등과 지난 수십년 동안 신자유주의로 더욱 심화된 양극화는 팬데믹 하에서 그야말로 야만적인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충격이 컸던 나라들의 통계는 거리두기를 강화할 때나 완화할 때나 그 충격이 모두 노동계급과 취약 계층에 집중됐다는 것을 보여 준다. 거리두기 강화는 소득 감소나 스트레스 등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안겨 줬고,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코로나에 감염돼 죽어나갔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희생자가 됐다.

전국적으로 수만 명에 이르는 노숙인들은 어떻게 됐을까? 식사를 제공하던 시설들이 문을 닫자 끼니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졌다. 노숙인을 치료해 주던 서울의 일부 공공병원들이 모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돼, 그들을 받아주는 병원도 없어졌다. 사회의 최하층으로 내몰린 그들에게 지금은 전쟁보다도 못한 상황일 것이다.

유럽의 가난한 노인들은 요양원에서 속절없이 죽어 갔는데, 일부 요양원에서는 공포에 질린 직원들이 다 도망쳐 노인들이 다 죽을 때까지 방치되기도 했다. 신자유주의 때문에 늘어난 민간 요양원은 정부의 감시도 받지 않았다. 수십 명이 사망한지 몇 주 만에 발견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금도 많은 요양 시설이 코호트 격리 상태에 있

다. 이는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한 공간에 가둬 놓고 사실상 감염되기를 기다리는 꼴이다. 평상시에도 요양 시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감염을 관리할 인력은 없다시피 하고 요양보호사들도 고령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추가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다른 병원에 병실이 부족하고 집에 가도 돌봐 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코호트 격리를 한다. 학교나 공장, 사무실이었던 이 자본주의 정부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 코호트

팬데믹 하에서 일어난 일들은 오늘날 평범한 여성들을 옥죄는 굴레가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팬데믹 하에서 여성은 병원, 선별진료소 등 팬데믹의 최전선에서 두려운 일차 방어벽 구실을 해 왔다. 자본주의 국제 경제 기구인 세계은행이 인정한다.

보육, 양육, 요양, 장애인 지원 등 이른바 '돌봄' 노동으로 불리는 일들은 자

본주의 사회에서 개별 가정에 떠맡겨져 왔다. 호황기에 지배자들은 여성을 생산현장으로 끌어내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려 했고, 이를 뒷받침하려고 이른바 '사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지배자들이 '돌봄'을 사회화한 것은 아니었다. 또, 현재와 미래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분야는(예컨대 교육) 사회의 핵심 기능으로 여겨졌지만, 노인 요양이나 아동 돌봄 등 이윤 획득과 직결되지 않는 분야는 평가절하되기 일쑤였다. 그래서 이 부문은 대개 여성의 일자리 취급을 받았고 저임금에 시달려 왔다. 교육과 훈련에 돈을 들이지 않고, 가사 노동으로 돌봄에 능숙해진 여성들을 부려 먹기 좋은 일자리였으므로 그나마 여성 노동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취업이 수월했고 따라서 여성 비중이 매우 높다.

그런데 팬데믹으로 돌봄 시설들의 운영이 중단되자 연쇄 효과가 나타났다. 돌봄 노동자들은 갑자기 실직에 준하는 상태가 됐다. 올해 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은 일이고, 방과후학

교 교사들이 지금도 겪고 있는 일이다.

돌봄 노동이 중단되면서 그 부담이 가정으로 돌아왔다. 여성들의 가사노동과 특히 양육 부담이 커졌다. 아이나 노인을 돌볼 여력이 없는 노동계급 가족 내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진 이유다. 가뜰이나 낮은 출산율이 급감한 것도 여성들이 느끼는 부담이 얼마나 큰지 보여 준다.

청년 실업도 크게 늘었다.(아래 그림)

한편, 바이러스의 확산과 이를 막기 위한 조처는 그동안 이 사회가 얼마나 노동자들에게 위태롭고 가혹한 환경을 강요해 왔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동시에 노동자들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움직이게 해 온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언급한 돌봄 노동자들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렇다. 그런데 이들은 일감이 없어지거나, 업무가 중단되면서 소득 절벽에 내몰렸고 언제 다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 대리운전 기사, 방과후학교 교사들도 그런 처지다.

영세 자영업자들도 고통을 받았고, 일부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다. 물론 자본가들이 하나같이 해고를 택한 것은 아니다. 일부 자본가들은 팬데믹이 끝난 뒤, 혹은 팬데믹 와중에 사업을 유지하려고 고용을 유지했지만(정부가 임금의 80퍼센트를 댔다) 임금을 삭감하고,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등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애썼다.

거리두기를 지킨다면(사실은 흥내만 내는 곳이 많다) 식사와 휴식 시간이

단축됐고, 후미진 흡연 공간이나 계단 밑 창고에서 쉬던 노동자들은 쉴 곳도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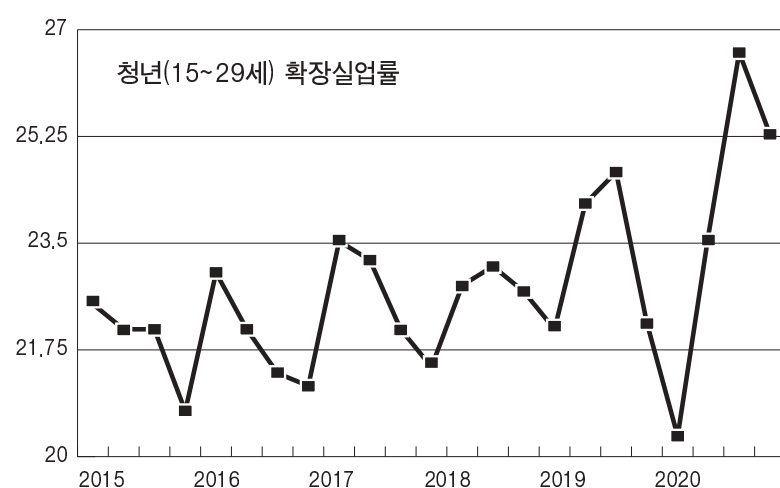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고질적인 저임금 탓에 두세 개의 일자리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투잡)으로 흔히 내몰린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콜센터나 학교 돌봄 노동자로도 일했는데, 감염 확산으로 물류센터가 폐쇄됐을 때 이 시설들도 운영이 중단됐다.

학교와 보육 시설도 운영이 중단됐지만 처지가 다 똑같지는 않았다. 고급 사립학교와 보육 시설은 학급당 학생 수가 적어서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돼도 계속 운영될 수 있었다. 10월 7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사립초등학교의 출석일수는 공립초등학교의 두 배나 됐다. 애당초 교사 수가 부족해 교육 여건이 안 좋던 보통의 학교들은 여지없이 폐쇄됐다.

병원 노동자들은 이전에도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려 왔는데 이제는 더 한층의 '헌신'을 강요당하고 있다.

택배 등 물류 운송 노동자들도 살인적인 노동강도 때문에 과로사가 잇따른다. 노동자들이 인력 충원을 요구했더니 고용주들은 그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정부는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에는 인색하면서도 기업주들에게는 투자 촉진이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자금을 제공했다. 이 와중에 신성장동력을 육성한다며 규제 완화 정책을 폈고, 박근혜 정부 시절 의료 영리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권덕철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하려 한다.





# 백신이 팬데믹을 끝낼 수 있을까?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의 의사들이 원인 모를 폐렴이 발생했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그때만 해도 그들을 포함해 아무도 상황이 지금처럼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강력한 팬데믹이 세계 전체를 휩쓸었다.

1년 뒤인 2020년 12월 20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는 170만 명을 훌쩍 넘겼다. 이 중 50만 명은 지난 한 달 새 죽었다. 북반구가 겨울로 접어들면서 확산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일일 확진자 수는 한 달 전 20만~3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40만~50만 명 수준이다. 통계 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 빈국들을 고려하면 실제 감염자 수는 통계 수치의 수배 내지 수십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주류 정치인들은 백신 개발 소식으로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고 외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지금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 접종이 시작된 백신들은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12월 초에 발표된 임상시험 보고서들을 보면, 코로나19를 앓는 사람들의 수가 백신을 맞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백신이 신속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면, 정말로 터널을 빠져나올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럼에도 “신속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면”이라고 조건을 단 이유가 있다.

현재 세 가지 백신이 사용 중이거나 사용 직전이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다.

사람 호흡기는 상기도와 하기도로

나뉘는데 각각의 면역 체계가 조금 다르다. 세 가지 백신 모두 하기도에서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백신을 맞을 경우 폐렴 등 폐가 망가지는 병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상기도 감염까지 막는지는 불확실하다.

화이자 는 이를 검증하지 않았고(따라서 모른다), 모더나는 효과가 있는 듯하다고 보고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자체 검사 결과 상기도 감염을 막는 효과는 ‘없다’고 보고했다.

한번에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코로나19를 독감 같은 병 정도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감염은 계속 일어나겠지만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병에 걸리는 것을 100퍼센트 막는 것도 아니고, 감염력이 독감의 두 배에 가까워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망할 것이다. 감염 자체를 막을 백신이 추가로 나올 때까지는 풍토병처럼 주기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시나리오조차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 지금 같은 속도로는 올 겨울 내내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즉, 확진자 중 사망자 수(증례치명률)는 낮아질 수 있지만,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그만큼 사망자 수도 늘어날 것이다.

백신의 분배는 야만적인 자본주의 세계 질서를 잘 보여 준다. 일부 선진국들이 한동안 백신 접종을 독점할 것이다. 인도만은 예외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백신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요 제약사와의 공급 계약에서 유



생계 지원 없는 방역은 교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가는지도 문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의 경우 보통 6개월 이상 면역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아직 시간이 그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재감염되는 사례도 있어서 이에 관한 의문은 해결되지 않았다. 백신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두고볼 일이다.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80퍼센트) 백신 접종을 마칠 때까지 면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코로나19는 계속 유행할 것이다.

백신의 안전성도 계속 의심받고 있

다. 그러다 보니 특히 코로나19를 두고 정부가 거짓말을 하거나 방역에 실패한 나라들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백신을 맞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를 설득하는 것은 만만찮을 것이다.

## 탐욕스러운 체제

해결되지 않은 이러한 난점들에도 불구하고 백신 개발 자체는 놀라운 일이라는 하다. 1년도 안 걸려 이 정도 백신이 나온 것은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다. 이번 백신 개발로 인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난제를 풀었다. 이 기술이 최종 성공을 거둔다면

(혹은 실패하더라도) 앞으로 백신 개발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다. 아직은 초보적이고 실험적인 단계에 있던 면역항암제가 어쩌면 실질적인 치료제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애당초 제약회사들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백신을 개발할 생각이 없었다.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을지 확실해질 때까지 개발 자체를 안 한 것이다.

팬데믹이 확실해져 수요가 충분해지고 각국 정부가 개발비를 쏟아붓자 그들은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 개발 경험도 없는 기업이다.

이런 상황은 자본주의의 우선순위가 오늘날 과학기술에 가하는 제약을 잘 보여 준다.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기술이 있지만, 경제 침체로 투자가 부족해서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주요 백신 개발에는 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됐다. 실제 투자는 더 많은데 왜냐하면 대부분 정부가 운영하는 연구소들이 이 개발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영국의 옥스퍼드대학교와 미국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가 각각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 백신 연구의 중추적 구실을 했다.

그러나 제약회사들은 이 백신을 다시 여러 나라 정부에 팔아서 거액의 이윤을 획득할 것이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CEO는 백신 개발 성공 소식을 언론에 알린 뒤 2~3일 만에 주식을 대량 처분해 큰 돈을 벌었다. 그러면서도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안 진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정말이지 탐욕이 지배하는 체제다.

# 코로나 발병의 자본주의적 기원

코로나 팬데믹의 기원과 대처 문제를 봐도 자본주의가 어떻게 인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지, 또 지배자들이 그 충격을 빈곤층과 노동계급에 전가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 점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자.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는 코로나19의 삼촌과 이모뻘이다. 셋 다 박쥐에서 유래한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축화되던 야생동물을 거쳐 인간에게 전해진 것이다. 코로나19의 위험에 가려져 있지만 지금 전국으로 확산된 조류 인플루엔자와 갈수록 남하하고 있는 돼지열병도 잠재적으로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감염병들이다. 2009년 신종플루가 그런 사례의 하나였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중국 과학자들이 2011~2018년 중국 내 돼지들을 조사했더니 갈수록 독성이 강한 인플루

엔자가 발견되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2018년 중국 돼지의 절반 가까이를 죽인 돼지열병 때문에 이 연구는 중단됐다.

〈노동자 연대〉가 소개한 롭 월러스의 글들을 보면 왜 이런 일이 찾아지는지 잘 알 수 있다. 간단히만 요약하면 이렇다.

자본주의적 농축산업은 자연과 인간 사회, 그 사이에 놓인 가축들 사이의 균형을 파괴하고 있다.

자연과 그 일부인 인간 사회의 상호연관 관계(마르크스는 이를 자연과 인간 사회의 ‘신진대사로 일컬었다’)를 고려하지 않고 이윤과 자본 축적만을 추구한 결과다.

공장식 축산업은 바이러스의 진화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장벽들을 제거한다. 특히, ‘너무 강력하면 숙주가 죽어

버려 멀리 퍼지기 어렵다’는 제약을 깬다. 우연히 그런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제거되기는커녕 크게 확산되게 한다.

다른 측면은 이런 생산 기지들이 ‘미개척지’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벌어진다.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지금까지 이뤄진 조사에 따르면, 후베이성보다 상당히 남서쪽에 있는 윈난성에서 가장 가까운 조상이 발견됐다.

## 자본주의적 농축산업

중국 남부, 특히 광둥성과 그 서쪽에 있는 윈난성은 오늘날 세계 축산업의 용광로 같은 곳이다. 1980년대 이후 국제 시장에 개방된 이 지역에는 해외 자본이 대량 유입됐고,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농축산업 생산방식도 크게 달라졌다.

1990년대 이후 윈난성 쿤밍시市的

덴츠호 주변의 변화를 표시한 지도를 보면 도시가 커지면서 그 주변의 농경지들이 인근 산림 지역으로 파고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윈난성은 말레이 천산갑 유통의 요충지다. 중국에서 천산갑은 약재와 고급 음식으로 인기 있는 동물인데, 중국 정부는 천산갑뿐 아니라 다양한 야생동물을 가축화하는 정책을 지원해 왔다. 농업 개방으로 처지가 열악해진 소농 등이 속한 지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2018년 돼지열병으로 인한 고기값 상승은 야생동물 유통을 가속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코로나바이러스가 인류에게 감염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왔다. 몇 해 동안 이 지역에서 퍼져가던 바이러스가 어느날 인간들 사이에서도 퍼지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은 이미 여러 차례 재현된 바 있고, 일부 과학자들은 이를 거듭 경고해 왔다.

그러나 자본가들과 그들의 정부들은 이런 위험을 무시해 왔다. 신종 감염병이 가축과 인간을 해쳐 이윤의 원천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지만 개별 자본가들은 이윤 경쟁 때문에 장기적 위험에 대처하지 못한다. 그보다는 항생제와 합성 사료, 유전자 조작 등에 투자해 이런 위험을 피하려 했다. 일부 자본가들은 오염되지 않은 미개척지나 규제가 약한 저개발국으로 농장을 옮겼다. 그러면서 개별 농장의 생산성을 높였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전체 농축산업에 심대한 위험을 낳았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주요국 정부들은 규제를 완화하고, 공적 연구 투자를 줄이는 한편, 기업 지원을 늘렸다.



# 자본주의 정부들의 대응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었다.

주요 서방 정부들은 중국의 봉쇄 조치가 낳은 효과(세계적 생산의 연쇄 마비)를 보며 전율했지만 이내 자신들도 비슷한 조치를 실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노동자들이 죽거나 건강이 크게 손상돼 이윤의 원천인 노동력을 잃도록 놔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국 정부도 개별 자본가들처럼 장기적 전망보다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과 단기적 이윤을 우선시하느라 대응에 실패했다. 실로 이들은 이윤이 줄어드는 상황을 일본일초도 견디기 어려워 했다. 팬데믹이 충분히 사그라들기도 전에 방역을 완화한 많은 나라들에서 2차 유행이 벌어졌고, 올 겨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백신만 바라보고 있다.

트럼프는 중간에 잠깐을 제외하고는 시종일관 코로나19를 무시했다. 이를 합리화하려고 끌어다 쓴 각종 '과학적' 견해들은 엉터리로 드러났고 지배자들 사이에서조차 불만과 조롱의 대상이 됐다.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기업들에게는 사실상 무제한 재정 지원을 했지만, 1929년 대공황 이래 최악의 실업 사태 속에서 재난지원금은 고작 한 차례 1200달러를 지급한 게 전부였다. 이런 형편없는 코로나 대응이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 핵심 이유다.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현재 미국에서 끼니를 거르거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2600만 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 트럼프

'집단면역' 전략을 공언한 영국의 존슨 보수당 정부는 노동계급 노인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어 하는지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대중의 공분을 샀다. 영국 노동자들은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백신 접종이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브라질의 우익 대통령 보우소나루도 코로나19를 무시했다. 가뜰이나 빈곤 인구가 많고 보건 인프라가 취약한 나라에서 사망자가 속출했다.

이처럼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들 중에는 정부의 무능이 두드러진 곳들이 많다. 그러나 정부가 만만찮게 코



많은 노숙인들이 갈 곳이 없어 사망했다

나19 방역에 나선 나라들 중에서도 기존의 빈곤과 신자유주의로 황폐해진 보건 인프라 때문에 커다란 피해를 본 나라들이 많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그렇다. 무엇보다 이 나라의 정부들도 이윤 감소를 못 견뎌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나라들에서 다시 사망자가 폭증하는 이유다. 인도, 러시아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 K방역

중국 정부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단기적 이윤을 우선시했지만, 이를 위해 취한 방식은 서방 지배자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미국과의 경쟁이 격화되던 상황 덕분에 중국 지배자들은 권위주의적 통제를 더욱 쉽게 강화할 수 있었다. 시진핑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애국주의 분위기를 만들어 냈고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입에 재갈을 물리고 감옥에 가졌다. 우한의 코로나 상황을 폭로하다가 수감된 장잔은 수감에 항의하며 단식을 했는데, 지난 10일 그녀를 면회하러 간 변호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장잔은 허리에 구속 벨트가 채워진 두꺼운 쇠수복 차림이었고, 왼손은 몸 앞에, 오른손은 몸 뒤에 고정된 상태였다. 그녀는 당국이 강제로 유동식을 먹이기 위해 위에 관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생긴 입과 목 주변의 상처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조치들도 권위주의적이었음을 지적해야겠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한국의 방역이 마치 범죄 수사 같다고 보도했다. 여론조사에서도 감염되는 것보다 감염 사실이 알려지는 게 더 두렵다는 의견이 60퍼센트를 넘을 정도였다. 집회 금지 조치는 사실 별 과학적 근거도 없다. 반면 공장과 사무실, 대중교통은 사실상 방치돼 있다.

메르스 경험 덕분에 정부가 초기에 비교적 신속히 움직인 것이 큰 도움이 됐고, 덕분에 경제 충격이 비교적 적었던 점 등이 작용해 문재인 정부는 일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이후로도 몇 달 간 정부의 방역지침에 사람들이 비교적 잘 호응한 배경이 됐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의구심은 확진자의 증가로 지금 입증되고 있고, 총선 이후 86퍼센트까지 올랐던 'K방역' 지지 여론은 정부가 1년 가까이 아무 준비도 안 한 것을 보며 50퍼센트로 주저앉았다. 수도권 권의 취약계층에서는 '의료붕괴'가 시작되고 있다. 빈곤층 노인이 일차 희생자가 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갈수록 인색해지지만, 기업과 기업주들에 대한 지원은 막대하다. 이들에게 지원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면서 집값이 폭등해 왔다. 정부 여당 지도자들의 오만한 언행은 냉소와 환멸을 낳고 있다.



부족한 의료수요로 인해 병원을 찾지 못하는 사람



전염병 예방

(위)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 정부의 투자 외면으로 감염 위험과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려 왔다

(아래) 사실상 실직 위기를 겪은 특고노동자들 정부는 이들의 생계보다 기업주들의 이윤을 지키려 한다

# 팬데믹 하의 투쟁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인해 노동계급이 겪고 있는 고통은 결코 자연 현상이 아니다. 경제 위기는 물론이고 감염병의 발생, 그 피해의 양상도 자본주의 체제의 우선순위와 그 작동 방식 자체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리고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지키려하는 그 수혜자들, 즉 자본가들과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배자들은 어떻게든 감염병과 경제 위기가 자신들이 지키려 하는 체제나 자신들의 결정과는 관계없는 불가항력적 현상으로 보이게 하려고 애쓴다. 그렇게 해야 노동자들에게 고통 '분담'을 강요하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그 원인에 궁극적 책임이 있는 자들은 오히려 이익을 얻고 있다. 스위스계 은행 UBS에 따르면, 세계 최대 부호들의 재산은 위기가 가장 고조되던 4~7월에 27.5퍼

센트나 늘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조건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물론 한국에서는 정부의 진정한 성격에 대한 착각 때문에 투쟁이 아직 강력하지 않다. 노동자들이 경제 위기로 인해 고용 불안을 느껴 행동에 나설 자신감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가장 주된 원인인 듯하다.

## 개혁주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런 상황을 냉정히 인식해야 한다. 계급투쟁 수준이 충분치 않다 보니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이는 다시 계급투쟁에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이다. 팬데믹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올해 투쟁이 가장 멀리 나아간 곳은 미국이었는데, 트럼프의 코로나 대응 실패와 경제 회복 불발이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

동은 최근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대중 운동이었다. 덕분에 트럼프를 쫓아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바이든 하에서 더 전진해야 할 것이다.

2019년 세계 곳곳의 반란을 낳은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팬데믹을 맞이한 지금 수면 아래에서는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 팬데믹이 진정되는지의 여부, 그 시기, 이후 경제 상황, 무엇보다 혁명적 좌파의 준비 정도 등이 이후 계급투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어슬픈 낙관과 불필요한 비판 모두를 피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행동이 충분치는 않지만 노동자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적지 않은 청년들은 체제의 위기를 보며 근본적인 대안을 찾고 있기도 하다. 이들이 좌절하기보다 제대로 된 대안을 만나도록 혁명가들의 조직을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



##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파업

# 공단 측의 약점을 이용해 싸워 이기다!

안우준 노동자연대 제천모임 회원

충북 제천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민간위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조합원들의 해고를 막아 냈다.

청풍리조트는 올해 3월과 4월에 각각 생활치료센터와 외국인 해외 입국자 임시 생활시설로 지정된 곳이다.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100여 명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청풍리조트 노동자들은 민간위탁 비정규직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사기극의 한 사례다.

청풍리조트는 2000년 설립 때부터 민간 위탁으로 운영됐다. 노동자들은 국민연금공단과 운영 회사가 5년 단위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마다 새로 고용 계약을 해야 했다. 경력과 근속은 인정받지 못했다. 심지어 식음 관리 부문 일부 노동자들은 상시 지속 업무인데도 3개월 단위 계약직이다.

임금과 노동조건도 열악하다. 공단과 운영 회사는 2018년 식대와 연장 근무수당, 휴일 근무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했다. 기본급 외에 식비, 교통비, 상여금 등 어떤 수당도 없다.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리조트에는 230여 객실이 있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은 전혀 없다. 탈의실이 없어 화장실에서 근무복을 갈아입어야 하고, 복도에서 휴식을 취하곤 했다.

올해 말 신규 운영 업체로 선정된 산하에이치엠은 선별적 신규 채용을 통보했다. 직원 30여 명을 해고하고 경력과 근속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12월 17일 파업 노동자들과 지지자들의 국민연금공단 본사 앞 집회

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운영회사와 노조의 문제라며 내내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운영업체 선정과 관리 감독 책임이 공단에 있다.

노조가 항의했는데도 12월 초에 공단과 산하에이치엠은 신규 채용 면접을 강행하려 했다.

이때부터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다.

조합원들은 면접 장소 로비를 점거

했다. 조합원 74명은 면접과 입사지원서 제출에 단 한 명도 응하지 않았다.

산하에이치엠의 태도가 바뀌지 않자 노조는 투쟁을 확대했다. 12월 16일 민주연합노조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는 “확대 간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청풍리조트 로비에서 열었다.

신원후 청풍리조트 지부장은 다음과 같이 결의를 밝혔다.

“이 회사에 근무한 지 11년 정도 됐다. 그동안 회사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해 본 적도 없었고, 민간위탁으로 5년마다 재계약될 때도 아무 소리도 못했다. 올해 노동조합 만들고 나서 본사가 있는 전주까지 가 봤다. [우리 투쟁을 응원하느] 현수막 걸려 있는 모습을 봤다. 가슴이 찡하고 속이 다 시원했다. 그동안 못했던 소리도 질러 봤다.”

이날, 청풍리조트가 12월 23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중앙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국민연금공단과 산하에이치엠은 생활치료센터 준

비와 운영 때문에 다급한 처지가 됐다.

노조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12월 말로 계획한 전면파업을 앞당기기로 했다.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결정이었다.

다음 날 노조는 바로 전면 파업에 들어갔고, 출근자 전체가 일손을 멈췄다. 급박한 결정임에도 전 조합원이 참가했다.

3~4차례 교섭에도 꿈쩍도 않고, 심지어 막말까지 서슴지 않던 산하에이치엠이 결국 먼저 교섭을 요청했다.

청풍리조트 노동자들은 투쟁과 파업으로 조합원 전원 고용승계를 따냈다. 5년 고용 보장도 동시에 약속 받았다. 만 60세 정년을 넘은 조합원 18명이 5년 동안 해고 불안 없이 일할 수 있게 됐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기간 동안의 노동자 처우에 대한 약속도 받아 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기간 동안 출근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는 평균임금 100퍼센트를 지급하고, 출근하는 노동자에게는 특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3, 4월에는 필수 인력이 아닌 지원팀과 비상 상근직으로 근무한 노동자들이 어떤 수당도 받지 못한 바 있다.

코로나로 인해 정부와 사측이 다급해 하는 상황에서 단호하게 투쟁해 성과를 낸 것이다.

노동자들은 이번 싸움을 “전초전”으로 여긴다. 임금과 처우 개선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무엇보다 5년마다 찾아오는 일자리 위협을 끝내려면 국민연금공단에게서 직접 고용을 쟁취하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이번 투쟁을 디딤돌 삼아 다음 투쟁에서도 승리하기를 바란다.

## 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

#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 이행은커녕 해고와 노조 탄압

양효영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받은 지자체의 민간위탁 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해고 위기에 처했다.

12월 7일, 서울의 강동구체육회는 공공연대노조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전원에게 권고사직 신청서 작성을 요구했다. 그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교섭을 요구하자, 강동구체육회 회장은 ‘꼭 이렇게까지 노조 가입을 해야 하나?’, ‘노조 결성하면 구청에서 주는 수당 깎겠다는’ 등의 말로 노동자들을 압박해 왔다. 그러다 노조가 11월 3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넣자 그날로 전 조합원에게 권고사직서제출을 강요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12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 시도를 규탄하고, 강동구체

육회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강동구청(구청장: 민주당 이정훈)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그러자 12월 11일 강동구체육회는 권고사직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주일도 안 돼 12월 17일 강동구체육회는 이경주 공공연대노조 서울생활체육지도자지회 강동구분회장과 윤명현 부분회장 둘에 대한 해고를 강행하고 있다. 체육회가 이 둘의 근무평정 평가점수를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60점 미만으로 준 것이다.

이 두 노동자는 7~10년의 근무 기간 동안 이처럼 낮은 근무평정을 받은 적도 없고, 코로나19로 모든 노동자가 업무 자체가 많지 않았기에 특별히 낮은 평정을 받을 이유도 없었다.

노조 탄압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노동자들은 강동구체육회에서 벌어진

채용 비리 등도 비판해 왔는데, 이런 정당한 항의도 빌미가 돼서 정규직화는커녕 해고로 내몰리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전국적으로 약 2700명 규모인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각 지역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나 동호회 등에 체육 강습을 제공해 왔다.

다른 많은 민간위탁 노동자들처럼 생활체육지도자들도 열악한 처우에 시달려 왔다.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약간의 수당만 받으며 1년차나 10년차나 똑같은 임금을 받아 왔다.

게다가 노동자들은 매년 재계약을 맺는 계약직으로,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 그리고 계약 권한을 쥐고 있는 지역 체육회의 ‘갑질’에 시달려 왔다.

지난해부터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했고, 올해

8월 문제부는 그간 1년 기간제였던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시군구체육회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문체부)의 무책임한 태도 속에서 전환은 계속 지연돼 왔다. 책임 주체가 모호하고 전환위원회 구성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은 가이드라인만 내놓은 채 실제 추진은 손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12월 재계약을 앞두고 신속히 무기계약직 전환이 진행되지 않으면, 기초단체 체육회들에 의한 괴롭힘과 해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실제로 일부 체육회에서는 연말 재계약을 빌미로 각종 위협과 괴롭힘이 더욱 심각해졌다. 강동구체육회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전남 무안체육회에서 이런 사례

가 있었다. 노동자들은 평소 체육회 간부의 동창회 모임 음식 준비나 개인 소유의 축사에 나무 심기 등에 동원되는 ‘갑질’에 시달려 왔다. 그런데 올해 재계약 과정에서 평가 결과로 3명이 해고됐다.

정부의 무책임한 민간위탁 정규직화와 지자체, 시도체육회의 책임 회피가 이런 사단을 낳은 것이다.

그래서 노조는 “이번 사태는 강동구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에 있는 체육회와 생활체육지도자 모두가 예의주시”하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강동구체육회 노동자들은 체육회 지원금을 지급하는 강동구청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자들이 지자체의 공공 서비스 업무를 수행해 온 만큼 이런 요구는 정당하다.



## 화석연료 기업과 유착한 인물들 중용

# 바이든의 기후 위기 공약, 믿을 게 못 된다

바이든이 기후 위기 대응만큼은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하다. 하지만 한국계 미국인 사회주의자 버지니아 로디노(사진)는 바이든과 민주당이 화석연료 산업과 구조적으로 얽혀 있고, 바이든의 인사 정책에서 벌써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폭로한다. 버지니아 로디노는 미국 마르크스주의 단체 '마르크스21' 회원이다. 이 글은 12월 3일에 쓰여졌다.  
[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넣은 것이다.

임기 종료를 몇 주 앞두고 트럼프 정부는 환경 정책 개악을 여럿 추진 중이다. 그 중에는 100년도 더 된 철새보호법에 대한 공격, 대서양[석유·천연가스] 시추 허가 구역 확대, 향후 공중 보건 상 위험 요소를 규제하기 어렵게 휘방하는 조치들이 있다.

트럼프가 공격하는 철새보호법은 1918년 제정된 것으로, 매 등 맹금류를 비롯해 1000종이 넘는 조류를 보호하는 핵심 법률이자, 파괴된 환경을 복원하게끔 강제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법률이기도 하다.(예컨대 석유기업 BP는 2010년 멕시코만 원유 유출로 인해 이 법에 따라 배상금 1억 달러를 물어야 했다. 당시 유출로 바다새 10만 마리 이상이 죽었다.) 트럼프 정부는 기업들이 그런 피할 수 있는 죽음에 책임지지 않아도 되게 하고 싶은 것이다.

이번 개악 전에도 트럼프는 이미 100건에 이르는 환경 규제를 폐기·완화했다. 트럼프 정부는 수로와 습지 수백만 마일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했고, 멸종 위기 생물에 대한 보호 방침을 완화했으며, 공유지 수억 에이커를 석유·천연가스 시추 가능 구역으로 개방했다.

개중에는 11월에 정부가 북극야생 동물보호구역에서 원유를 시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도 있다. 또다른 개악이 이뤄지면 뉴멕시코주(州)에 있는 차코캐니언국립역사공원 주변 공유지 수천 평방마일과 알래스카 야생 지대 깊은 곳 등에서 채굴·채광이 추가로 허용될 것이다.

한편, 바이든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1조 7000억 달러(한화로 약 1900조 원)를 배정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이 문제가 자신에게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 하지만, 기후 재앙의 규모가 워낙 크고 사태가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바이든의 계획은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기후 변화를 대놓고 부인하는 작재트럼프가 앞으로 4년 동안 백악관에 없을 테니 다행이지만, 앞으로 4년 동안 대응이 불충분하고 탄소 배출량은 계속 늘어날 것도 재앙적이긴 마찬가지다.

트럼프 하에서 미국은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했다. 바이든 하에서 미국은 협정에 재가입할 것이다. 하지만 5년 전 오바마 정부 시절,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는 늘리기로 협정을 타결하는 것을 보며 환경운동이 기겁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파리 협정



바이든은 화석연료 기업들의 친구 바이든은 환경 파괴로 악명이 높은 수압파쇄법(프래킹)도 금지하지 않는다



이전의 코펜하겐 회담 때도 오바마는 자신의 명망을 이용해 국제적 합의의 절차를 우회하고 미·중 간 막후 거래로 협정이 구속력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그래서 그 결과물인 파리 협약은 구속력이 없다.] 바이든도 오바마의 방식을 이어갈 태세가 돼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기간에 바이든 선거운동본부는 화석연료 기업과 연계된 인물을 에너지 부문 자문위원으로 두고, [핵발전, 화석연료 기업들과의] “타협적”인 기후 위기 정책을 지향하고, 프래킹\* 금지에 반대해서 비판받았다. 바이든은 화석연료 기업들이 주는 선거운동 후원금을 거부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화석연료 산업 투자자가 주최한 대규모 후원금 모금 행사에 참가해 비판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전력노조(IBEW) 위원장 로니 스티븐슨이 바이든 인수위원회에 합류했는데, 전력노조와 스티븐슨은 포괄적 기후 위기 대응 계획의 일환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자는 주장 일체에 공공연히 반대해 왔다.

바이든은 오바마 정부 시절 에너지 부 장관을 지낸 어니스트 모니즈를 입각시키거나 신설된 기후 위기 국제 대응 조율 직책에 임명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보도했다. 기후 단체들은 바이든이 모니즈에게 어떤 자리도 쥐서는 안 된다고 요구해 왔는데, 모니즈가 장관직을 마친 후 [미

국의 천연가스·전력 기업] 서던컴퍼니의 이사가 됐기 때문이었다. 모니즈는 프래킹 지지자이기도 하다.

오바마 시절에는 많은 민주당 지지 인사들이 화석연료 기업들과 친밀했지만 이후에는 거리를 뒀던 데 반해, 모니즈는 여전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장관직을 마친 후 모니즈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 ‘에너지 미래 구상’의 의장은 석유기업 BP의 CEO 출신인 존 브라운 경이다.

### 막대한 기업 후원금

모니즈는 줄곧 화석연료 기업들과 짝짝한 연계를 맺어 왔었는데, 예컨대 BP의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모니즈가 MIT에서 설립한 연구단체 ‘에너지 구상’은 석유 기업들의 후원금에 의존해 운영되며 몇몇 세계 최대 화석연료 기업들에서 막대한 기부를 받았다. ‘에너지 구상’은 화석연료 기업의 성장을 옹호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2017년에 내각을 떠난 후 모니즈는 장관 시절 지원했던 화석연료 가공 기업[서던컴퍼니]에서 유급으로 직책을 맡았다. 모니즈는 이 모든 일을 하면서도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화석연료 산업의 성장이 함께 가야 한다는 오바마 정부의 에너지 전략을 계속 지지한다고 자랑스럽게 밝혔다.

[이 글이 쓰인 후 모니즈는 실제로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부 장관 후보로 물망에 올랐지만 환경단체들의 반발 속에 무산됐다. 하지만 모니즈는 바이든의 에너지 관련 공약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구실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바이든의 인수위에 참여한 인물 여럿이 그와 중요한 연계를 맺고 있어 여전히 막후의 실력자로 알려져 있다.]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됐다. 바이든은 민주당에서 화석연료 산업의 돈을 손꼽히게 많이 받는 인물을 기후 쟁점 등에 대한 대응을 주 임무로 하

는 백악관 고위직에 앉혔다. 바이든은 “기후 변화 운동가들과 재계를 잘 연계 하리라 기대”한다며 백악관 공보수석에 루이지애나주(州) 하원의원 세드릭 리치먼드를 지명한 것이다.

리치먼드의 선거구는 루이지애나주에서도 정유소와 플라스틱 공장이 즐비해 “암(癌) 지대”로 악명 높은 지역에 있다. 리치먼드는 10년 동안 하원의원을 지내면서 석유·천연가스 기업에게서 후원금을 하원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받았다.

미국 에너지관리청은 2030년이 되면 미국의 석유·천연가스 생산량이 2018년 대비 30퍼센트 늘 것이라고 전망한다.

리치먼드는 화석연료 기업에게서 약 34만 1000달러(약 3억 7500만 원)를 받았는데, 전력·천연가스 공급업체 엔터지에게서 5만 달러, 석유 기업 엑손모빌에서 4만 달러, 석유 기업 셰브론·필립스66·발레로에너지에게서 각각 1만 달러를 받았다. 미국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심각한 10개 지역 중 7개가 위치한 지역구의 의원이면서 그런 돈들을 굴여모은 것이다.

리치먼드는 중요한 기후·환경 관련 의안에서 거둬 당론을 거슬러 투표했다. 기후 재앙이 자신의 출신 주인

루이지애나를 강타했을 때, 리치먼드는 공화당과 함께 화석연료 수출을 늘리고 석유·천연가스 수송관 개발을 지원하는 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리치먼드는 타르샌드 개발을 위한 키스톤 XL 대형 송유관 매립 사업\*에도 찬성 투표를 했다. 리치먼드는 프래킹 허가 지역에 대한 환경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민주당 법안에도 반대표를 던졌고, 오바마 정부가 프래킹에 대한 환경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공화당이 발의했을 때도 찬성 투표를 했다.

리치먼드는 바이든 선거운동본부 공동 본부장을 지내며 ‘그린 뉴딜’을 지지하지 않았다. 사실 놀랄 일은 못 되는 게 바이든 자신도 ‘그린 뉴딜’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대선 후 <CBS>의 한 시사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리치먼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집권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통치할 것이지만, [그 가치에 맞는] 법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 의회 밖으로 나가서 이를 두고 왈가왈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화석연료 기업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이든이 “석유 산업에 대한 전면적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고 “중단기적으로 기업에 더 도움될” 수도 있다고 말한 것도 놀랍지 않다.

여기서 관건은 바이든 정부가 기후 문제에 관해 어떤 바람을 (추상적으로는 전적으로 좋은 말만 할 수도 있다) 품고 있느냐가 아니다. 바이든 정부가 기후 문제에서 “취약”하고 공화당과 타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조차 핵심이 아니다(그것 자체로도 나쁜 일이긴 하지만 말이다). 진정한 문제는 바이든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를 굳건히 지지한다는 것이고, 이윤 추구나 현상 유지에 방해가 될 수준으로 기대가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 13면으로 이어짐

### 용어설명

#### 프래킹

천연가스·석유 등을 채취하려고 땅속에 고압의 액체를 분사해서 광석을 파쇄하는 것. 대규모 지하수 오염 등 환경 파괴를 일으킨다. 수압파쇄법이라고도 한다.

#### 키스톤 XL 대형 송유관 매립 사업

오바마 정부가 승인한 대형 송유관 매립 사업으로, 미국 중부에서 캐나다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에서 환경 재앙을 낳을 것으로 예상돼 반대 운동이 대규모로 분출했다.



# 이 시국에 전기요금 인상 부채와 기후 위기 비용을 서민에게 전가 말라

정선영

17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 내용은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를 오르내릴 수 있게 하고 (연료비 연동제), 전기료에서 기후환경요금을 분리해서 고지하고, 전기를 적게 쓰는 991만 가구에겐 제공하던 할인 혜택을 대부분 폐지한다는 것이다.

먼저 연료비 연동제는 3개월마다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의 가격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콩(원료)이 두부(전기) 보다 비싸다”(한전 사장 김종갑)며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한 한전 사측이 요구해 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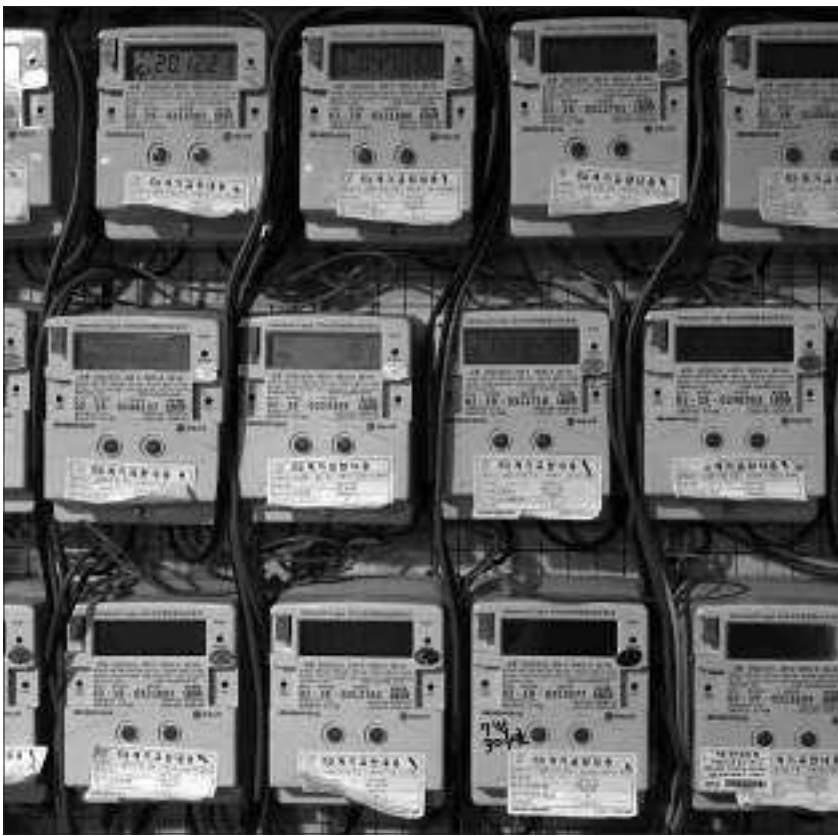
전기요금은 다수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정부가 정책적으로 통제해 왔다. 그래서 전기료는 2013년 이후 동결돼 왔다.

그런데 연료비 연동제에 따르면 시장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전기료가 오르내릴 수 있게 된다.

올해는 심각한 불황 속에 유가가 전례 없이 낮아져서 내년 상반기에는 전기료가 짝퍽 인하되겠지만(4인 가구 기준 1050~1750원) 현재 유가는 상승세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요금이 오를 공산이 크다.

정부는 연료비 인상에 따른 가격 조정 범위를 제한했지만 기준에 따르면 더라도 가구의 전기료는 해마다 5퍼센트씩 인상될 수 있다.

기후·환경요금을 분리 고지하는



소득 감소, 실업, 빈곤이 증가하는데 전기 요금까지 인상하겠다는니

것도 전기료를 더욱 쉽게 인상하기 위한 포석이다.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더욱 쉽게 비용을 전기료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후·환경요금은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는 부자에게 더 유리하고 서민들에게 더 불리하다. 기후 위기의 비용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물론 기업들도 전기요금이 오를까 봐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요금 인상으로 인한 진정한 부담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5년간 한전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50대 대기업에게 무려 7조 원에 달하는 요금 혜택을 줬다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전기를 적게 쓰는 991만 가구에겐 제공하던 할인 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할인액을 50퍼센트 축소하고, 이듬해에는 일부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할인 적용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이를 통해 한전은 약 4000억 원을 절감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서민 가정에 부담이 떠넘겨지는 셈이다.

정부가 이런 전기요금 개편을 한 이유는 한전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심각한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민 전기요금 인하

와 기후 위기 대처에서 비롯한 적자는 정부가 기업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게다가 한전의 부채가 늘어난 이유 중 하나는 한전이 석탄화력발전 등 환경 파괴적 사업에 투자해 대규모 손실을 냈기 때문이다. 한전은 이명박 정부 시절 무리한 해외 투자를 추진했고, 최근에도 호주의 석탄 사업에 투자했다가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한 것 등 때문에 큰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데 쓸 돈의 일부만 투자해도 서민들의 전기료를 더 많이 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전 사측의 경영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서민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

우파들은 정부의 탈핵 정책 때문에 부실이 커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다. 정부 스스로가 밝혔듯 2019년 원전 이용률은 70.6퍼센트로 2018년 대비 오히려 4.7퍼센트포인트 상승했다.

## 기후 위기 대처 비용 전가

환경 비용을 이유로 서민들의 전기세를 인상하겠다는 것도 결코 지지할 만한 정책이 아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현재 각국 정부들은 기후 위기를 막을 진정한 대책은 취하지 않으면서 유류세·전기세 인상 등 기후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겨 왔다.

문재인 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실상 이 정부 하에서도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의 전기료를 올리는 것은 기후 위기의 책임을 개인

들에게 떠넘기고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환경 NGO들과 진보진영의 적지 않은 단체들은 이번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지지했다. <민중의 소리>도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늦었지만 환영한다” 하는 사설을 냈다. 기후 위기에 대처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민들의 전기료를 올린다고 기후 위기를 막을 수는 없다. 지금도 한국에서 가정용 전기는 전체 소비량의 10퍼센트대에 불과하다. 한국의 가구당 전기 소비량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전기료 인상은 전기 난방기에 의지해야 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더한층의 고통을 줄 것이다.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지지하는 것은 말로만 그린뉴딜 운운하며 실제로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기후 위기의 비용을 전가하는 정부의 위선을 포장해 주는 효과만 낼 것이다.

지난해 프랑스에서 유류세를 인상하며 기후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 마크롱 정부에 맞서 노란조끼 운동이 터져 나왔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노란조끼 시위대는 정부의 유류세 인상 조치에 반대하며 “부자들이 생태적 전환에 필요한 돈을 내게 하라”고 요구했다.

사실 정부가 별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이런 정책을 발표한 배경에는 정치적 위기 속에서 일부 온건한 NGO와 진보진영 지도자들을 정부 지지층으로 묶어 두려는 계산도 작용한 듯하다.

그러나 진정으로 기후 위기에 맞서고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키려면 이런 정부의 위선을 폭로하며 잘못된 정책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 12면에서 이어짐

## 바이든의 배신에 항의하는 운동 진영

트럼프 정부의 재앙적 행보와 바이든 정부의 ‘평소 하던 대로 하자’ 식 대응에 어떻게 저항해야 할까?

진보적 기후 운동 청년 단체 ‘선라이즈 운동’은 대선 때 경합주에서 청년 약 350만 명의 투표를 조직했는데, 이제는 바이든에게 기후 변화 대응 약속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주도하고 있다.

세드릭 리치먼드 지명에 대해 ‘선라이즈 운동’은 이렇게 논평했다.

“세드릭 리치먼드는 화석연료 산업에서 막대한 돈을 받아왔고, 석유·천연가스 기업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자기 선거구에서 환경이 오염되는데도 침묵했다. 청년들과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사람들은 바이든 정부가 거대 석유기업보다 자신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배신감에 가깝다. 대통령 당선자 바이든이 가장 먼저

지명한 사람이 정치 이력 내내 화석연료 기업들에게서 자기 당인 민주당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기부금을 받은 사람이니 말이다.”

‘선라이즈 운동’은 바이든의 리치먼드 지명이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가능케 했던 청년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규정했다.

11월에 ‘선라이즈 운동’은 리치먼드 지명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바이든, 쫓지 마라” 하고 외치며 필라델피아에 있는 바이든 선거운동본부 건물로 행진했다. ‘선라이즈 운동’은 내각의 요직에 대한 추천 인사의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바이든과 인수위원회가 이 명단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도 기용하리라는 기색은 전혀 없다.

‘멸종 반란’은 기후 변화 문제로 대규모 직접 행동을 벌이겠다고 [대선 전에] 선포했는데, 선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당선하든 [기후 변화 대응

을] 압박하려는 목적에서였다.

11월 19일에는 원주민 운동, 인종차별 반대 운동, 기후변화 운동 활동가들이 워싱턴 DC에 있는 민주당 당사 앞에서 시위를 벌여, 바이든이 기후 변화에 즉각 대응하고 ‘그린 뉴딜’을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시위대는 로비스트들과 친기업 인사들이 내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미주리주(州) 하원의원 당선인 코리 부시와 뉴욕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등 하원의원 여럿이 이날 시위에서 연설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운동 덕분에 하원의원에 당선했습니다. [진보파 하원의원 당선자로 꼽히는] 자말 보먼, 코리 부시, 몬테어 존스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도 운동 덕입니다. [오카시오-코르테스와 함께 진보파 하원의원 ‘스퀴드(분대)’로 꼽히는] 일한 오마, 라시다 틀라

입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진보파 상원의원으로 알려진] 에드 마키가 재선한 것도 운동 덕이었습니다. 바로 운동의 힘입니다. 저들에게는 돈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표를 던지는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들, 사람들, 청년들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석과 정치적 힘을 청년들에, ‘흑인 목숨을 위한 운동’에, 여성에, 미국 전역의 노동계급에 빚진 것을 늦었지만 갚을 때가 왔습니다. 계급 쟁점이고, 인종 쟁점이며, 젠더 쟁점입니다.”

오카시오-코르테스 같은 사람들이 쟁점을 부상케 하고 운동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도움이 된다. 하지만 운동이 자본주의 정치 체제 하에서 우리를 대변해 줄 사람에 표를 던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구실을 맡을 수 있음을 봐야 한다.

이날 청년들이 조직한 시위는, 정치

인들이 자신들이 한 약속을 지키게끔 하고 지난 4년 동안 후퇴했던 것들을 되돌리는 데에도 운동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 준다. 세계적인 ‘그린 뉴딜’과 그 이상을 추진하려면 운동이 더 커지고 더 강력해져야 한다. 앞으로 과제는 다인종적 기후 정의 운동을 건설하고, 이 운동이 노동조합 운동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수많은 노동계급 사람들이 녹색 경제라는 관점을 지지하게끔 조직하고 전략을 구상하는 것도 과제다. 동시에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 경제는 이윤 추구에 기반하는 자본주의 하에서 불가능함을 힘주어 주장해야 한다. 녹색 경제는 전 세계적이고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지구 그 자체의 필요까지 충족할 경제다. 지구를 지키려면, 세계를 변혁해야 한다.

출처 미국의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마르크스21’ 웹사이트 / 번역 김준호



#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 반복되는 노동자 고통

##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유병규

12월 21일 유동성 위기에 빠진 쌍용차가 결국 11년 만에 또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당일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900억 원과 우리는 행 차입금 150억 원을 만기 연장일에도 상환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뿐 아니라 국내외 금융기관에 빌린 대출금 600여억 원도 상환하지 못해 왔다.

쌍용차 측은 이날 '회생절차 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도 함께 법원에 접수했다. 법원이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해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이다. 사측으로선 영업 활동을 지속하면서 투자 유지, 매각 협상을 추진할 시간을 벌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금융권은 3개월 가량의 시간을 벌게 됐다고 보는 듯하다. 이렇게 당장 부도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기업 회생 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무엇보다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은 또다시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들고 있다.

이날 쌍용차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작업 도중 언론 보도로 소식을 접했다고 한다. 2009년 대량해고의 비극이 떠올랐다고 한다. 10년의 복직 투쟁 속에 다시 돌아간 공장은 안정적인 일

자리를 보장해 주지 않았다. 일자리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다며 임금과 복지의 대폭 삭감을 강요 받았는데, 이제는 구조조정 압박이 심해질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지금과 같은 위기는 이미 예견돼 왔다. 쌍용차는 15분기 연속 적자였다. 옆친데 댄친 격으로 올해 경제 위기와 코로나19로 내수와 수출 모두 지난해 대비 판매가 20~30퍼센트 감소했다. 3분기까지 자본 잠식률이 86.9퍼센트로 위기가 커져 왔다.

쌍용차 위기에 책임 있는 마힌드라는 약속했던 신규 투자를 차일피일 미루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마힌드라는 11월 10일 "쌍용차에 더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며 발을 빼겠다고 했다.

산업은행은 대출금 기한을 연장하며 위기를 지연시켜 주기는 했지만, 신규 자금 지원은 못 하겠다고 선을 그어 왔다.

### 반복된 위기

쌍용차 노동자들은 이미 오랫동안 경제 위기와 이에 따른 매각으로 거듭 고통을 겪고 있다.

쌍용차는 1998년 경제 위기 직후 대우그룹으로 매각된 이후 대우 그룹 부도로 1999년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2004년 중국 상하이차로 매각되지만



복직 후 다시 고용불안에 놓인 쌍용차 노동자들 영구 국유화해 비극적 역사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

2008년 경제 위기 직후인 2009년 상하이차의 '떡튀'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2011년 마힌드라로 또다시 매각되지만 깊어지는 경제 위기로 결국 법정관리 신청으로 이어졌다.

이렇듯 십수년 동안 반복된 위기 속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해고와 임금 삭감을 강요 받았다. 극심한 생활고와 끝을 알 수 없는 불안에 노동자와 가족이 비극적인 죽음을 택하기도 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가족 30명이 목숨을 끊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외쳤던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이처럼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노동자들이 위기의 대가를 치러 온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와 불안정성, 그리고 시장 논리에 내던져진 노동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지 보여 준다.

지금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운영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직접 쌍용차를 소유·운

영하는 영구 국유화다.

정부는 경제 위기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부만이 쌍용차 같은 기업에 거액을 투자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위기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살리려고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 이런 돈을 기업주들이 아니라, 경제 위기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 문재인 정부의 '플랫폼 종사자 대책'

#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 아니라는 기만

양효영

12월 2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사람 중심 플랫폼 경제를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이하 플랫폼 종사자 대책)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은 이번 대책이 "플랫폼 종사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발표되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에 노동계 위원 전원(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과 여성계 위원 등이 이 대책을 반대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표결을 강행해 밀어붙였다. 일자리위원회에서도 노동계 위원들은 고작 들러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민주노총, 대리운전노조, 라이더유니온 등은 정부의 대책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외면한 것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12월 21일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일자리 위원회 앞에서 플랫폼

종사자 대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보호’라는 미명 아래,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정부의 플랫폼 종사자 대책의 기본 방향은 플랫폼 노동자의 근무 조건, 업무 수행의 자율성 등 고용상 지위와 형태가 다양하다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플랫폼 종사자 상당수가 취약층에 해당하므로 최소한의 보호와 약간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특별법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고용 조건이나 형태가 무엇이든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먹고살 수 있고, 어떤 형태이든 사용자의 통제 속에서 착취받고 있다는 점에서 여느 노동자들과 다르지 않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지만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시와 통제를 받는다. 플

랫폼 기업들은 직접적이든 알고리즘 조작 뒤에 숨어서든 노동자들의 노동을 통제해 왔지만 자신들은 그저 일감과 노동자를 '매칭'해 줄 뿐이라며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내몰렸고,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이나 하루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도 감내해야 했다. 사회보험도 적용받지 못했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관계법 적용이 우선임을 명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극히 일부에만 예외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실제 매우 소규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대리운전의 경우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 받았고 배달 노동자 중 일부가 노조법과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바 있다. 정부는 "동일 직종에서도 사업주의 지시·감독의 정도·양태가 상이"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미 법적으로 근로자지위를 인정



12월 21일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플랫폼 종사자 대책 규탄 기자회견

받은 직종에 대해서도 사례를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 중 자영업자로 '오분류'된 부문은 고용형태 자문기구를 신설해 이곳이 기존 판례들을 반영해 바로잡도록 한다지만, 이는 노동자성 인정 회피를 정당화하는 구실이나 하기 십상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민

간위탁으로 '오분류'된 노동자에 한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지만, 이는 대부분의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 회피를 정당화했던 것처럼 말이다.

### 사용자 책임 면제

결국 정부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 15면으로 이어짐



# 코레일네트웍스 파업에 집합금지·퇴거 명령 출퇴근 만원 지하철보다 야외 거리두기 집회가 위험한가?

이재환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노동자들(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철도고객센터 지부)의 파업이 41일째(12월 21일 현재)를 넘고 있다. 노동자들은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인 현실을 바꾸고, 정년 연장 등 처우 개선을 위해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서울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는 대형 현수막을 걸고서 농성과 집회를 해왔다. 대전역과 철도고객센터 앞에서도 홍보전과 농성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약속 이행 요구에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팽팽 계엄을 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여전히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62세로 정년을 연장하기로 한 합의 이행은커녕 올해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 180여 명에게 퇴사 명령을 내렸다.

## “가만히 있으라”

이런 와중에 용산구청은 서울역 플랫폼(야외)에서 하는 LED 촛불 집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정부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자들은 “2미터 씩 거리를 두고, 발열 체크를 철저히 하고, 마스크도 다 쓰는 등 정부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트린다.

“지하철로 하루에 수만에서 수십만 명을 실어나르고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철이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데,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며 촛불을 드는 것



정부는 방역지침을 핑계로 최저임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철도 비정규직의 절절한 요구를 억누르려 한다

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의 눈과 귀와 입을 닫고 손발을 묶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서재유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장)

문재인 정부는 기업주들의 이윤을 위해서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을 알면서도 방역 지침을 제대로 강제하지 않았다. 반면, 유독 저항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방역 지침을 내세워 엄벌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취해 왔다. 국회 노동법 개정 통과를 앞둔 시기에

는 10인 이상 집회도 금지했고, 방역 지침을 근거로 기자회견도 폭력적으로 막았다.

그러나 방역 수칙을 지키며 개최한 실외 집회에서 감염 위험이 높다는 근거가 제시된 바도 없다. 정부가 노동자들의 정당하고 절절한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방역 지침을 내세우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당연하다.

여기에 더해 철도공사는 서울역 농성장과 LED 촛불 집회에 퇴거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회당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장은 500만 원, 다른 간부들은 100만 원을 철도공사에 납부하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했다. 노동자들은 울분을 삭히며 12월 21일부로 서울역 농성장을 철수했다.

## 청와대 앞 농성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파업을 지속하고 문재인 정부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코로나도 무섭지만 최저임금이 더 무섭다”는 게 노동자들의 절박한 심

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가 절실하다. 철도노조 성북승무지부의 정규직 기관사들은 파업 지지 ‘인증샷’을 찍어서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소속 지부들도 투쟁기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여러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철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가 더 확대되길 바란다.

## ▶ 14면에서 이어짐

는 사용자 책임을 면해 주고 있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에 대해 단순히 직업 소개소로만 규정하는 대목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이미 카카오톡,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들이 ‘중개 플랫폼’일 뿐이라는 이유로 대리운전 노조의 교섭을 수차례 거부하고 있다.

또, 이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행사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미 12월 9일 민주당은 특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는 빠진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대책에서도 정부는 노조할 권리가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의 “자유로운 단체 설립”이나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플랫폼 특별법은 플랫폼업체들이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를 법으로 정당화시켜 주게 될 것이다.”(민

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정부의 이번 대책은 과거 노무현 정부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화물기사·화물지 교사 등 위장 자영업자들에 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서,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권 보장을 피해 가려 했다. 당시 이 법률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정책은 이런 방향으로 적용돼 왔다.

그래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고 직종은 12년 동안 겨우 14개로 늘었고, 가입률은 평균 14퍼센트밖에 안 된다. 여전히 많은 특고 노동자들이 노조 인정을 위해 지난한 투쟁을 해야 한다. 대리운전노조는 노조 설립 신고 후 428일 만에 필증을 받았다.

## 점진적 개선?

이번 대책은 플랫폼 종사자와 기업 간 공정한 계약을 위해 표준계약서 활용을 주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표준계약서 도입만으로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고3법’을 하겠다는 것이다. 본지가 비판했듯이 특고3법은 여전히 플랫폼 노동자 등 특고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제한적이고 차별적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2022년에나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플랫폼, 특고 노동자들은 전속성 기준(한 사업장에서 주되게 일하는

지 여부) 때문에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해 왔는데,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직종·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적용 징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다시 직종 “특수성”에 의해 배제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생길 수도 있다.

게다가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그저 노동자에게 수수료나 계약 기간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한정하고 사용자 책임은 전혀 지우고 있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누가 돈을 낼 것이냐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독소적인 일부 조항(예컨대 플랫폼 기업이 ‘직업 소개소’라는 식의 설명 등)을 제외하면 특별법 자체는 플랫폼 노동자 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물론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라이더 유니온 등이 요구해 온 이륜차 보험료 부담 완화, 대리운전노조가 요구해 온 보험 중복가입 방지 등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제들은 대체로 “검토”나 “방안 마련” 정도로 제시되고 있는 정도다.

그러나 이런 부분적 개선이 이뤄진다고 해도 플랫폼 종사자 대책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남는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이 뒷전으로 밀리면, 보호 대책은 매우 제한적이기 십상이다. 임금이나 노동시간 또는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납부 책임 등 조건 개선 문제가 모두 사용자 책임을 강제해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별과 노동권 배제를 제도화 할 것이 분명할 플랫폼 특별법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의 재현?

#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갖고 시간 끄는 정부

박설

“왜 사람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더 이상의 원통한 죽음을 막아야 한다.”

고(故)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씨, 고(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 등이 살을 에는 칼바람 속에 국회 본청 계단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한 지 (12월 22일 현재) 12일째다. “정치인과 정부가 나 몰라라 하기 때문”에 유족들이 나섰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산재 사망사고는 법의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가령, 12월 20일에는 평택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져 노동자 3명이 추락사 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22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화재 폭발 등으로 노동자 4명이 사망한 포스코에서 최근에도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져 왔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유족들과 함께 단식 농성을 해 온 데 이어, 500인 동조 단식, 촛불집회, 각계 지지 기자회견 등도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미 지난 9월 국민청원 10만 명 동의를 얻어 국회에 상정된 바 있다.

## 차 떼고 포 떼기

주류 양당 정치인들도 여론의 눈치를 보며 잇따라 단식 농성장을 찾았다.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유족들을 만나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연내 입법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들은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친기업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반발하는 기업주들을 편들며 누더기로 만들려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 발의한 관련 법안들은 이미 그런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12월 17일 민주당 의원총회는 좀더 선명히 후퇴의 길을 열어젖히는 결정을 내렸다. 이 법 제정 추진을 거듭 약속했던 당 대표 이낙연은 정작 이 자리에서는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차 떼고 포 떼서 누더기로 만들자는 주장이 난무하는 난상 토론만 벌어졌다. 그리고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보수적 태



12월 20일 산재 추락사로 세 명이 목숨을 잃은 평택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공사판은 죽음이 도처에 널린 지뢰밭이나 다름없다

도를 취해 온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법사위(국민의힘과의 협치를 위한 다며)로 공을 넘겼다.

실제로 민주당 정책위는 기업주에 대한 처벌 대상 범위를 좁히고, 반복적 법 위반과 산재 은폐 시도 기업주에게 조차 유죄 추정(“인과관계 추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제 견해를 내놓았다.

민주당 내에서는 인과관계 추정 삭제, 50인 미만 사업장 처벌 유예, 다중이용업소 제외 등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얘기도 나온다. 기업주들의 안전·보건 책임과 처벌 범위를 대폭 낮추려는 것이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비판을 받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정당한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이다.

그조차 상임위 일정도 아직 잡지 않아 이번 회기 내 통과시킬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인다. 상임위까지만 통과시키고 차기 국회로 넘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 바 있다.

## 구의역 김군 사망 모욕

최근 폭로된 국토부 장관 내정자 변창훈의 ‘구의역 김군 사망 모욕 발언’은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또 다른 사례이다. 2016년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19세 청년 김군은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 작업 도중 들어오는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몸이 끼어서 참혹하게 죽었다. 그때까지 알려진 바로 서울지하철2호선에서 벌어진 13번째 유사 사망 사고였다.

당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변창훈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 “개(김군)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비용 절감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노동자들을 희생시킨 구조적 살인을 개인 탓으로 몬 파렴치한 발언이다.

문재인은 김군 동료들이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데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제에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중대재해법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내년 2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양형 기준이 만들어지는 만큼, 이를 고려해 “종합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을 질질 끌며 내용상 산안법의 양형 기준을 보강하는 수준

을 제시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제에서 정의당과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지만, 기업주들의 이익에 반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 당 소속의 임의자의원이 제출한 관련 법안은 기업주들에게 매우 제한적 의무 규정을 뒤서 책임과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단식 농성 중인 유족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를 향해 “기업 눈치 그만 보고” 연내에 온전한 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한 이유이다.

그 점에서 정의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하고 주류 양당을 비판한 것은 옳다. 그럼에도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해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삭제 등에 타협할 수 있다고 열어 뒀는데, 이는 부적절하다. 주류 양당의 시간 끌기와 후퇴 시도에 제동을 걸지도 못하면서 운동의 대의만 훼손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 빈번한 산업재해 줄이려면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은 이 체제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 준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이 우선되는 문제 말이다.

노동자들의 비극적 재해와 죽음은 개인의 부주의나 안전불감증 탓도,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이 갑자기 닥친 불운 때문도 아니다. 안전을 지킬 기술이 부족해서? 안전에 투자할 돈이 없어서? 그것도 아니다.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거둬 들이는

동안,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안전망도 없이 단독 작업과 과로로 몰리고, 유해가스에 노출되고 폭발사고에 희생되고, 기계에 끼이고 추락하고, 직업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고 있다. 기업주들의 탐욕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이 비극을 낳고 있다.

빈번한 산업재해를 줄이고 원천 기업주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온전히 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법·제도적 장치만이 아니라, 실제 그것을 현장에 강제할 수 있는 투쟁을 강화해 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서 기업주들은 안전에 대한 투자를 더 한층 꺼리며 ‘수익성을 제약하는 낭비’로 여기고 있다.

사업주에게 안전 수칙을 지키고 투자를 늘리도록 요구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위험요인이 발견됐을 때 작업을 중단시키고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도록 강제할 수 있는 현장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좀더 자세한 논의는 본지 337호 ‘말뿐인 ‘안전’ 약속에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를 보시오.)

노동자들은 안전보다 돈벌이를 중시하는 자본주의 이윤 논리에 도전할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에도 건설 현장, 조선소, 발전소와 우체국, 택배·콜센터·마트 등 서비스 산업, 고속도로와 철도, 병원 등 곳곳에서 노동자들은 법·제도 개선과 작업 현장의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노동운동은 이런 노동자들의 투쟁을 활성화 하려고 애써야 한다.



단식 12일째인 고(故)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씨